정책자료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姜文盛 · 羅秀燁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姜文盛 · 羅秀燁

2001.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정권초기 경기침체기를 맞으면서 선거전 공약 당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9.11 테러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출범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정운용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에 다사다난했던 2001년 미국의 경제동향을 검토하고 부시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장기 호황기가 2001년 3월로 마감되고 경기침체국면에 빠져들었으며 9.11 테러사태로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이전 걸프전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조기수습의 경우 9.11 테러사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단기 외부충격이 될 것이나, 장기전 또는 확전의 경우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각의 대부분이 이전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父) 행정부의 관료를 지낸 전력이 있고 기업인 출신들로 구성되어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은 친기업가적인 보수성향의 색채를 강하게 보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9.11 사태에 맞서 부시 행정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거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11차례에 걸친 연준리의 재빠른 저금리정책은 통화정책 사상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부는 1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전면적인 조세감면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경기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금리와 재정확대 등의 정책적 대응은 내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국의 대외교역과 투자에서 최대비중을 점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경제의 침체 및 경기회복 여부는 향후 한국경제의 향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대외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경제의 동향과 정책적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미국경제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최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제2장 선거운동 중 제기된 주요 쟁점 6

1. 개관 6
2. 교육 7
3. 의료부문 8
4. 사회보장 8
5. 기타 쟁점들 9
   가. 총기류 관리 9
   나. 선거자금 10
   다. 이민법 11

제3장 2001년 경제동향 12

1. 9.11 테러사태와 미국경제 12
   가. 소비심리가 관건 12
   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및 정책적 대응 15
   다. 시나리오별 전망 15
2. 아프간 공습과 미국경제: 과거 전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8
   가. 동향 18
   나. 과거 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 18
   다. 이번 공습이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 31

제4장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및 방향 40

1. 부시행정부의 내각 및 성향 40
   가.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 40
   나. 국무장관: 콜린 파웰(Colin Powel) 41
   다. 재무장관: 폴 오닐(Paul O'Neill) 42
   라. 상무장관: 돈 에반스(Don Evans) 44

마. 농무장관: 앤 베네맨(Ann Veneman) ····· 44
바. 주택·도시개발장관: 멜 마르티네즈(Mel Martinez) ····· 45
사. 로렌스 린지(Lawrence B. Linsey) ····· 45
아. 백악관 실장: 앤드류 카드(Andrew H. Card Jr.) ····· 46
2. 기본 방향 ····· 47
가. 작은 정부 ····· 47
나. 시장경제체제 ····· 48
다. 자유무역 ····· 49
3. 조세 및 재정정책 ····· 49
가. 전면적인 조세감면정책 ····· 50
나. 경기부양책 마련 ····· 54
다. 향후 재정수지 전망 ····· 55
4. 통화정책 ····· 55
가. 금리인하 내용 ····· 56
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 58
5. 국제금융정책 ····· 60
가. 환율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 60
나. 아시아 위기와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 60
6. 통상정책 ····· 61
가. 무역촉진권한 ····· 62
나. WTO 뉴라운드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정책 ····· 64
다. 무역 제재 ····· 68
라. 버드(Byrd) 수정안 ····· 69

제5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72
1. 최근 한미 경제현안 및 전망 ····· 72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 72
나. 주요 통상현안 ····· 78
다. 전망 및 대응 ····· 91
2. 거시경제 ····· 93
가. 신경제 버블 ····· 93
나. 전망 ····· 95
다.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96

참고문헌 ····· 98

<표차례>

<표 1> 정당별 대통령 후보 ····· 2
<표 2> 부시 당선자의 인적사항 ····· 3
<표 3>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 6
<표 4> 미국 테러사태 이후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전망 ····· 14
<표 5> 시나리오별 전망 ····· 16
<표 6>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미국 거시지표 ····· 19
<표 7>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 ····· 20
<표 8> 베트남戰 동안의 주요 미국경제지표 ····· 22
<표 9> 베트남戰 동안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 ····· 23
<표 10> 걸프戰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 25
<표 11> 주요 환율의 변동 추이 ····· 27
<표 12> 주요국의 주가 변동 추이 ····· 28
<표 13> 최근 상황과 걸프전의 유사점 및 차이점: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 31
<표 14> 시나리오별 전망 ····· 33
<표 15> 최근 각종 사태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보조 ····· 34
<표 16> 기관별 수정 경기전망 ····· 39
<표 17>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 ····· 47
<표 18> 단계적 소득세율 인하 일정 ····· 52
<표 19>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 차이 ····· 54
<표 20> 미국의 연방 재정수지 추이(회계연도 기준) ····· 55
<표 21> 1990년대 초와 최근 경기침체기의 금리정책 비교 ····· 58
<표 22> 한미 양국간 무역 추이 ····· 73
<표 23> 주요 품목 대미수출 변동 추이 ····· 74
<표 24> 주요 품목별 대미수입 변동 추이 ····· 75
<표 25> 산업별 교역비중 변화 추이 ····· 76
<표 26> 한미 양국간 투자 추이 ····· 77
<표 27> 한국의 자동차 대미수출 ····· 79
<표 28> 한국의 자동차 수입 ····· 80
<표 29> 1998년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주요 내용 ····· 82
<표 30> 한국의 자동차 세율 ····· 84
<표 31>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추이 ····· 88

<표 32> 미 국제무역위원회 판정 내용 ····· 90
<표 33> 주요 기관별 경기전망 ····· 96

<그림차례>

<그림 1> 소비자신뢰지수 동향 ····· 13
<그림 2> 제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 21
<그림 3> 베트남전과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 24
<그림 4> 걸프戰에서의 소비자 및 생산자 심리 ····· 26
<그림 5> 걸프전과 산업생산지수 ····· 27
<그림 6> 걸프戰 전후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 추이 ····· 29
<그림 7> 걸프戰 동안의 국제원유가 변동 추이 ····· 30
<그림 8> 국방 및 우주산업의 생산지수: 1947년 이후 ····· 36
<그림 9> 최근 연방기금금리 추이 ····· 57
<그림 10> 실질이자율 변동 추이 ····· 59
<그림 11> 경상GDP대비 비주택고정투자 비중 ····· 94
<그림 12> 경상GDP대비 NASDAQ 시가총액 비중과 노동생산성 ····· 95

제1장 서론

□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정권은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음.

- 상·하원 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선전하여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공화 221: 민주 212)를 유지하는 성공하였음.

- 그러나 선거결과 50대 50으로 나타났던 상원의 의석구성은 2001년 5월 공화당의 제포즈(James Jeffords)의원이 공화당 당론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 우세(민주 50: 공화 49: 무소속 1)로 전환되었음.

- 물론 주지사의 비율에서는 공화당 우세(공화 29: 민주 19: 무소속 2)이지만, 치열한 개표 접전과 상원에서의 다수당 지위 상실은 부시행정부의 출범이후 큰 도전으로 인식됨.

□ 지난 2000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前Texas주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前부통령) 후보를 선거인단수 271 對 267, 4표 差로 앞서며 당선되었음.

-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명이 입후보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전과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로 압축되었음.

-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포인트 내외의 격차를 보이며 낙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민

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유태인 출신의 리버맨(Joseph Lieberma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국제 원유가 상승에 대하여 전략 비축유의 방류를 고어진영에서 촉구하자 부시진영이 국가안전을 위해한다는 논리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TV 토론회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홍보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선거 판세가 역전됨.

- 또한 민주당 고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인 경우 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클린턴의 도덕적 문제를 큰 약점으로 평가한 고어 후보측이 클린턴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성공을 이슈화하는 데 실패하였음.

<표 1> 정당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소속 정당
해리 브라운(Harry Browne)	자유당(Libertarian)
팻 뷰캐넌(Pat Buchanan)	개혁당(Reform)
조지 부시(George W. Bush)	공화당(Republican)
알 고어(Al Gore)	민주당(Democratic)
존 해겔린(John Hagelin)	자연법당(Natural Law)
래리 하인스(Larry Hines)	무소속
데이빗 멕레이놀즈(David McReynolds)	사회당(Socialist)
랠프 네이더(Ralph Nader)	녹색당(Green)
버어니 팰리키(Bernie Palicki)	무소속
하워드 필립스(Howard Phillips)	헌법당(Constitution)

주: 대통령 후보 이름 알파벳 순

-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혁당의 善戰이 공화당의 부시(父)후보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민주당의 클린턴이 재선하는데 일조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의 네이더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 후보의 지지계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플로리다州에서 치열한 혼전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제도를 이용하는 미국 대통령선출방식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부시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1946년 7월 6일생인 부시는 예일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텍사스 주지사로 재직하였음. 자세한 인적 사항은 <표 2> 참조.

<표 2> 부시 당선자의 인적사항

전직	텍사스 주지사
생년월일	1946년 7월 6일
출생지	Connecticut州 New Haven
가족사항	父: 前 미국 대통령 1988~92년 동생: 플로리다 주지사(Jeb Bush) 부인: 로라 웰치(Laura Welch) 1977년 결혼 자녀: 2녀 (Barbara, Jenna)
학력	Yale 대학 졸업(1968) Harvard 경영대학원 (1975)
종교	감리교
군 경력	Texas Air National Guard 1968~73년
정부 경력	Texas 주지사 1994~현재
기타 경력	석유 및 에너지 관련 회사 설립 및 운영 1975~86년 Bush(父) 선거운동 1986~88년 미 프로야구 Texas Rangers 구단 경영 1989~94년

-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이 'Washington Outsider'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前대통령 부시(George Bush: 1988~92년 재직)이므로 주요 정책자문위원 중 대부분이 아버지 행정부의 관리 또는 자문위원 출신으로 워싱턴 정가의 관점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시 당선자는 40세까지 민간기업에서 일하였고 석유 및 에너지 관련 회사를 설립·운영한 바 있지만, 각종 미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특출한 업적은 없다고 지적됨.

- 그러나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텍사스州의 프로야구팀을 운영하면서 텍사스州에서 널리 알려진 후 주지사로 당선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함.

□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에 따른 부시행정부 내각의 성향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2001년 미국경제상황을 점검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먼저 살펴봄.

- 제3장에서는 2001년 미국경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2002년 경제를 전망함.

○ 200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사태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경제 위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세계로 확산되었음.

- 제4장에서는 부시행정부 내각의 성향을 분석하고 2001년 경제상황에 대응한 주요 경제정책을 정리함.

- 제5장에서는 제3~4장에서 논의된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을 배경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는 2000년 12월 외교부 용역으로 제출된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와 『오늘의 세계경제』 제2001-02, 05, 06, 08, 17, 26, 31, 34, 35, 36, 39, 42, 51, 61호 등을 취합한 뒤, 최근 정보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작성되었음.

제2장 선거운동 중 제기된 주요 쟁점

1. 개관

□ 2000년 상반기(1월 24일~3월 21일) 예비선거를 통해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고어와 부시는 2000년 7~8월에 있었던 각 당의 전당대회를 거쳐 노동절(9월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였음.

<표 3>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날 짜	주요 이슈
1. 24 ~ 3. 21	민주-공화 양당의 예비선거
7. 31 ~ 8. 3	공화당 전당대회 (Philadelphia, PA), 딕 체니(Dick Cheney)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
8. 14 ~ 8. 17	민주당 전당대회 (Los Angeles, CA), 조셉 리버맨(Joseph Lieberma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
9. 4	노동절,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10. 3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 (Boston, MA)
10. 5	부통령 후보 토론회 (Danville, KY)
10. 11	두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 (Winston-Salem, NC)
10. 17	세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 (St. Louis, MO)
11. 7	대통령 선거일
2001. 1. 20	미국 제43대 대통령 취임일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2E로서 교육(Education)과 경제(Economy)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경제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이슈에 가려져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제 원유가의 급등과 국내 경기 둔화 조짐 등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 그 외 의료부문, 사회보장, 총기 규제, 선거자금 개혁, 최저 임금, 이민법 등이 주요 이슈이었음.

2. 교육

□ 부시 후보는 교육부문을 쟁점으로 클린턴 행정부 및 고어 진영을 공격하였음.

- 부시 측은 "경제는 좋지만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부문이 '교육불황(Education Recession)'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 공교육의 질적 저하 및 재정 부실에 있음.

- 이러한 교육불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시대통령은 학교교육의 質이 향상되는 州에 대해서 5년간 5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연방교육자금의 5%가 실험학교에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험학교 창립용 대여금 보장제도의 설립을 제안함.

- 또한 교육용 저축에 대하여 5,00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하며 연방교육보조금을 사립학교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선언함.

□ 고어 후보의 경우 연방교사 기준제도를 확대하고 교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교사의 質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였음.

-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직을 택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함.

-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부시 후보가 제시한 공적자금의 사립학교 보조를 반대함.

3. 의료부문

□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의료부문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일반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의 연방 老後의료보험 및 보조금제도이며, 메디케이드(Medicaid)는 빈민계층에 대한 연방 의료보조금제도임.

- 부시대통령은 개인의료저축예금의 사용을 확대하고 부유한 노년의료제도 혜택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겠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함.

- 민주당의 고어 후보는 의료보험 대상의 확대, 메디케어 약품보조금제도의 확대, 저소득층에 대해 어린이 의료보조제도 확대 및 의료 보험에 대한 조세인하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하였음.

4. 사회보장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SS)제도는 미국 국민들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연금제도임. 최근 '베이비붐(Baby Boom)'세대가 은퇴할 시점이 되자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근로자의 상대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자금고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사회보장 세율을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은 현재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흑자의 사용용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고, 정부보다는 개개인이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은퇴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주요 이슈가 되었음.

□ 고어 후보의 경우 민간인이 사회보장기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에 반대한 반면, 부시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저축, 투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음.

-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민주-공화 양당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에 기인함.

○ 공화당의 경우 개개인의 경제활동범위에 대해 자유로운 반면 민주당은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제4장에서 깊게 논의됨.

5. 기타 쟁점들

가. 총기류 관리

□ 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총기류 규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

- 부시대통령은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총기

류 매입 가능연령제한을 21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권총소유자 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대함.

- 민주당의 고어 후보는 권총 생산자와 매매업체들의 통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소형권총의 판매금지를 제안함.

나. 선거자금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소프트 머니(Soft Money) 등 선거자금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었음.

- '소프트 머니'란 특정 후보에게 제공되는 정치 헌금(Hard Money라 지칭)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의미함.

- '하드 머니'의 경우 후보 당 1,000달러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소프트 머니'에는 한도가 없음.

- 하지만 개인후보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슈에 대한 홍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나 의원선거에서 미국의 각 정당들은 '소프트 머니'를 개인후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소프트 머니'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96년 선거이었음.

○ 민주당이 선거자금 불법모금 논란이 일자 '소프트 머니' 수백만 달러를 헌금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클린턴이 거액 헌금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짐.

- 이에 대해 부시-고어 후보 모두 '소프트 머니'의 폐지를 주장함.

○ 부시대통령의 경우 그 대신 '하드 머니'의 1인당 기부금 상한선(현 1,000 달러)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부자 명단의 발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반면, 고어 후보는 급증하는 선거자금의 필요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선거운동 보조제도를 확대하고 TV 선거운동시간의 무료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함.

다. 이민법

□ 이민법 역시 주요 이슈이었는데,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과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이민자 대우에 대한 우려 등이 논쟁의 핵심이었음.

- 부시대통령은 외국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영어 전용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고어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민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2개 언어 교육을 지지하였고 이민자에 대한 복지제도 혜택 수여를 지지함.

제3장 2001년 경제동향

1. 9.11 테러사태와 미국경제

가. 소비심리가 관건

□ 200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9.11 테러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한 국면에 접어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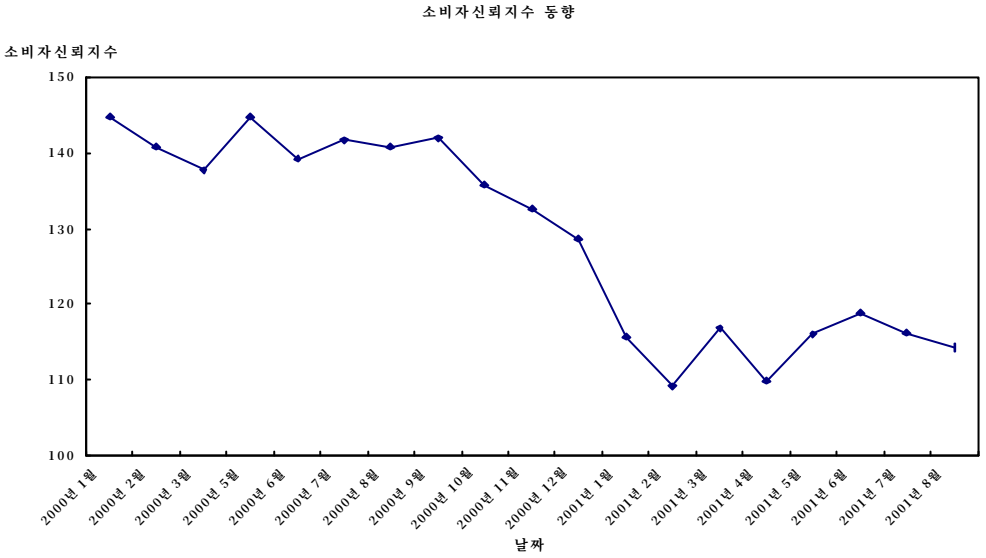
□ 미국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비심리인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그나마 미국경제를 지탱해오던 소비지출이 둔화된다면 미국경제는 어려워 질 것임.

- 지난 5, 6월 반등에 성공하였던 소비자신뢰지수는 7, 8월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미국경제의 회복에 불안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DRI-WEFA는 이번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소비자신뢰와 금융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DRI-WEFA 보고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경제적 영향을 개괄적으로 전망하고 향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수정함.

<그림 1> 소비자신뢰지수 동향



□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9.11 사태는 조기에 급속히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 사태의 해결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에는 경제활동이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사태 지역에 집중된 금융권의 업무 마비, 소비심리 냉각, 여행감소에 따른 영업활동 저하 등의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보안 및 안보에 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여 보안, 건설, 컴퓨터 및 통신 부문에 대해 상당한 투자 및 지출이 이루어질 전망임.

□ 분기별 경제전망

- DRI-WEFA는 현재 3/4분기가 거의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9.11 사태가

3/4분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3/4분기 실질GDP증가율을 당초 1.3%에서 1.0%로 하향 수정.

- 그러나 소비자 및 기업심리, 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4/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질GDP증가율은 0.5%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

- 특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급락(-6.2%)하면서 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DRI-WEFA는 내년 실질GDP증가율도 2.4%에서 2.2%로 수정하였으며, 정부 및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사태 수습정도에 따라 2002년 2/4분기 이후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이러한 전망 역시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한 것인바, 미국이 취할 조치의 전개방향에 따라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 미국 테러사태 이후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전망

(단위: %)

	2001 1/4	2/4	3/4	4/4	2002. 1/4	2/4	3/4	4/4
실 질 G D P	1.3	0.2	1.0	0.5	2.2	3.5	3.8	4.5
소 비 지 출	3.0	2.5	1.8	0.9	2.4	3.4	3.2	3.7
(내 구 재)	10.6	7.1	-0.6	-6.2	10.7	8.9	8.6	5.9
(비내구재)	2.4	0.4	2.4	2.9	1.5	3.0	2.8	3.6
비주택고정투자	-0.2	-14.6	-9.7	-4.6	-0.6	2.1	7.6	6.2
설비 및 소프트웨어	-4.1	-15.1	-11.7	-4.3	3.7	4.4	9.9	10.1

주: 2001년 2/4분기까지는 실제수치이며 이후는 전망수치임.

자료: DRI-WEFA(2001년 10월 발표)

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및 정책적 대응

□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국정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있음.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로 인한 금융 인프라의 훼손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백업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번 테러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준리는 금융권에 필요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 연준리는 지난 1987년 10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 미국의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연초 6.5%이던 연방기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연준리는 예상치 못한 이번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월 2일 정규 FOMC회의 이전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현실화되었음.

○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 역시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였음.

다. 시나리오별 전망

□ 미국경기 전망은 이번 테러사건에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좌우될 것인바, 크게 조기에 수습되는 경우와 장기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이번 테러의 배후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라덴(Osama bin Laden)인 바, 미국이 특수부대의 투입 등에 의해 테러 배후 세력을 조기에 진압하여 사건이 조기에 수습되는 경우가 첫 번째 시나리오임.

- 이번 사태해결이 장기화되거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 시나리오임.

<표 5> 시나리오별 전망

	시나리오 I: 조기수습	시나리오 II: 장기화 또는 전쟁 발발
미국경기전망	· 올 4/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 경기회복 불투명
외환시장	· 달러화 반등 (엔화 및 유로화 약세)	· 달러화 약세 지속
주식시장	· 미국경기 조기회복 기대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상승	·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로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하락
금리	·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투자자금의 이동으로 금리상승	· 안전자산인 채권수요증대로 금리하락
국제원유가	· 배럴당 25달러 내외 (두바이油 기준)	· 단기: 배럴당 32달러 이상 급등 · 사태해결 후: 배럴당 25달러 수준에서 안정 (이상 두바이油 기준)

1) 시나리오 I: 조기 수습

□ 이번 사태의 배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되고 수습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기존의 올 4/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이번 사태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나, 시나리오 II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뉴욕지역 및 미국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됨.

- 1999년 기준 뉴욕주의 생산규모는 미국 전체 실질GDP의 8%(약 7,300만 달러, 실질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9.11 사태가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임.

-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 소매 및 유통업 등 가게의 철시와 영업정지, 공항통제에 따른 상업활동 억제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9.11 충격에 의한 소비지출 감소는 단기에 그칠 것이며, 9.11 사태가 미국의 경기침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9.11 사태로 미국경제는 당장 3/4분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소비지출하락에 따른 미 경기침체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9.11 충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12월 현재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시나리오 II: 장기화 또는 전쟁 발발

□ 이번 사태의 해결이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소비자들의 공황심리가 만연해지고 금융시장 마비가 장기화되어 미국의 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경기침체에 빠질 것임.

-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고되면 소비자들의 공황심리가 확산되어 소비가 하락하고 투자 역시 침체되어 업종을 불문하고 미국경제 전체가 침체될 것임.

-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미국의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여 재무부 채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재무부 채권과 더불어 석유, 금 등과 같은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국제원유가 및 금값이 상승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어 지속될 것임.

-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경제의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2003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2. 아프간 공습과 미국경제: 과거 전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동향

□ 미국이 10월 8일 새벽(한국시간) 9.11 테러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자,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

□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이번 9.11 테러를 과거의 테러와 비교하는 것은 규모나 상징성 측면에서 무의미함.

- 20세기 들어 미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베트남戰(Vietnam War), 걸프戰(Gulf War) 등임.

나. 과거 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

□ 미국의 아프간 보복공격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쟁 발발 시점이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에서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걸프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그 당시 미국 경제구조가 1990년 이후의 경제구조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이슬람권과의 전쟁이라는 점과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걸프전에 대한 분석이 최근의 상황과 전쟁발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1) 제2차 세계대전

□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었던 1939~45년 동안 미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8%에 이르렀음.

- 이러한 경제성장은 정부지출, 특히 국방부문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6>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미국 거시지표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실 질 G D P	5.3	-3.5	8.1	8.5	17.1	18.4	16.5	8.2	-1.2	-11.1
개인소비지출	3.7	-1.6	5.6	5.2	7.2	-2.4	2.7	2.9	6.3	12.3
총민간국내투자	25.0	-33.9	28.6	39.3	22.2	-47.2	-41.0	23.6	32.1	153.7
수 출	26.0	-1.0	5.6	13.5	2.7	-34.3	-16.6	7.5	41.5	117.7
수 입	12.5	-22.3	5.0	2.4	22.9	-9.2	26.1	4.6	6.3	-17.1
정 부 지 출	-3.6	7.5	9.1	1.5	66.1	134.7	49.1	12.8	-12.9	-65.5
(국 방)	0.7	4.1	9.6	72.8	442.6	264.9	63.4	14.5	-14.1	-75.9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표 7>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이 뒷받침되

는데 1939~40년에는 소비와 투자가 미국경제를 이끌었으나, 전쟁이 심화된 1941~44년에는 정부소비지출이 높은 경제성장률 기여를 나타내었음.

○ 1943년의 경우 정부지출 중 국방관련부문(1937년 실질 기준)이 8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소비지출 785억 달러를 상회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1944년에도 지속되다 1945년부터 서서히 완화되었음.

- 개인소비지출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총민간국내투자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는 낮은 수준이었음.

<표 7>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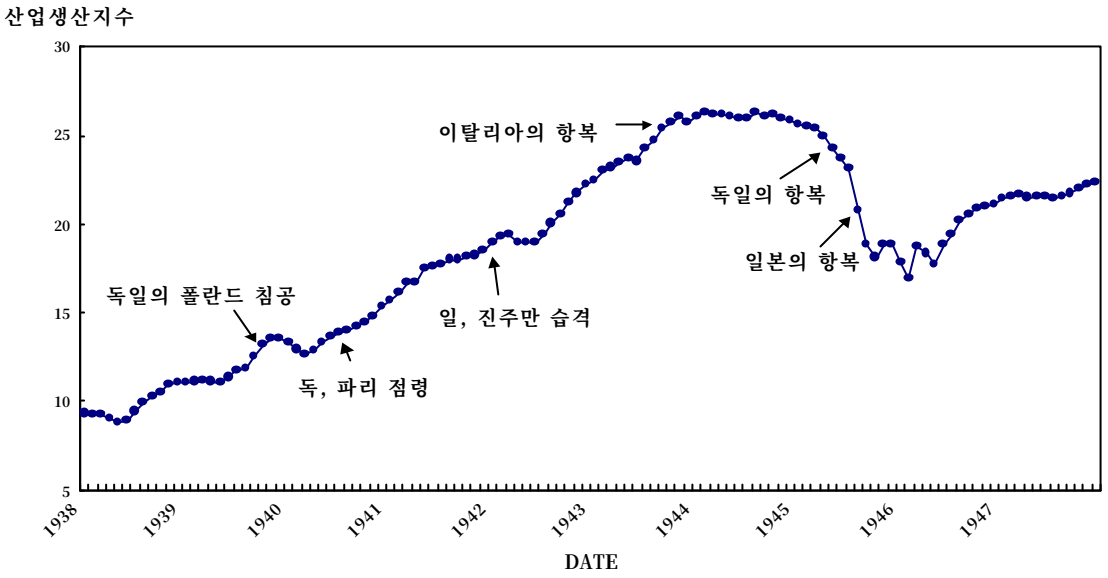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실질 GDP	8.1	8.5	17.1	18.4	16.5	8.2	-1.2
개인소비지출	4.47	3.78	5.04	-1.53	1.52	1.48	3.10
총민간국내투자	2.48	4.00	2.94	-6.55	-2.59	0.75	1.16
정부지출	1.10	0.24	9.81	27.67	18.71	6.00	-6.17
국 방	0.16	1.14	10.74	28.88	19.62	6.00	-6.02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유럽과는 달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생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서구경제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였음.

-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미국의 산업생산은 국방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유럽지역의 산업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체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그림 2> 제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 베트남戰

□ 1960년 12월 南베트남에서 '南베트남 해방민족전선(베트콩)'이 결성되고 北베트남의 원조를 받아 그 세력을 확대하고 결국 공산진영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자, 베트남의 공산화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미국은 1961년 정규군을 파견하여 對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특수전쟁'을 전개하게 되었음.

□ 미국의 정규군이 베트남으로 파병된 1961년부터 1975년 베트남이 적화통일될 때까지 미국은 연평균 3.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제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베트남戰 동안 미국경제는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세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그러나 이 기간 중 1970, 1974~75년에는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된 적이 있음.

<표 8> 베트남戰 동안의 주요 미국경제지표

(단위: %)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실질 GDP	2.3	4.3	6.4	2.5	3.0	3.3	5.8	-0.4
개인소비지출	2.0	4.1	6.3	3.0	3.7	3.8	4.9	2.2
총민간국내투자	-0.7	6.7	14.0	-4.6	5.8	11.4	11.7	-17.7
수 출	1.7	7.5	2.0	2.2	5.4	0.7	21.9	-0.7
수 입	-0.7	2.7	10.6	7.3	5.7	5.3	4.6	-11.1
정 부 지 출	4.8	2.4	3.1	7.5	-0.4	-1.9	-0.7	1.9
국 방	4.1	-2.5	-1.8	12.8	-4.7	-10.2	-6.5	-1.2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소비지출이 실질GDP증가율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개인소비지출에 의해 미국경제가 성장하였던 이유는 전쟁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베트남戰의 경우 정부지출(1996년 실질 기준)이 가장 많았던 해(1968년) 9,566억 달러를 기록하여 1943~45년(연간 1조 달러 이상)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1943~45년 동안 정부지출은 실질GDP대비 70%에 육박한 반면, 베트남戰 동안에는 26~28% 수준에 불과하였음.

○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경제구조가 개인소비지출 중심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임.

○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0, 1974~75년의 경제성장률은 0.2%, -0.6%, -0.4%를 각각 기록함.

<표 9> 베트남戰 동안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

(단위: %)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실질 GDP	2.3	4.3	6.4	2.5	3.0	3.3	5.8	-0.4
개인소비지출	1.27	**2.55**	**3.91**	1.83	**2.26**	**2.35**	**3.05**	1.33
총민간국내투자	-0.10	1.00	2.15	-0.76	0.90	1.66	1.96	-2.98
정부지출	1.04	0.53	0.69	1.67	-0.10	-0.43	-0.16	0.41
국 방	0.43	-0.27	-0.17	1.19	-0.48	-0.90	-0.49	-0.08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베트남戰 동안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연평균 8.25%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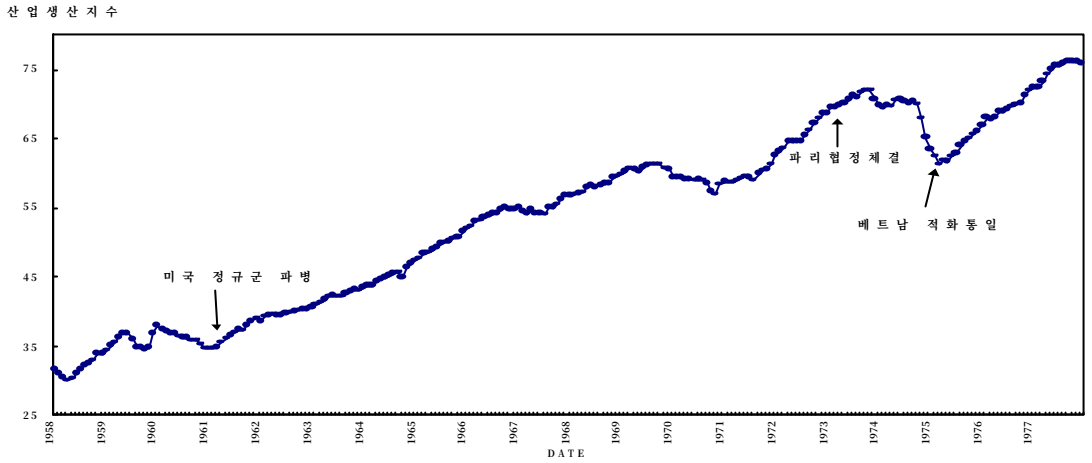
- 특히 1961~65년의 전쟁 초기에는 산업생산지수가 연평균 12.3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상승하였음.

□ 1960년대 경기호황의 주된 원인은 (1) 경기호황 초기의 팽창적인 통화정책, (2) 1964~65년의 대대적인 소득세 감면 등이며, 베트남戰 동안 확대된 정부지출 역시 부분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지나친 재정 및 통화팽창정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베트남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였으나, 지나친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1970년대 이후로 연기되어 1970~80년대 미국경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음.

<그림 3> 베트남전과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3) 걸프전

가) 개요

□ 걸프전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계기가 되어, 1991년 1월 17일~2월 28일 약 6주간 미국·영국·프랑스 등 33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임.

- 1990년대 초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석유물량을 과잉 공급하여 국제원유가가 크게 하락하였음.

- 이에 이라크 경제가 침체하자,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비난하고 1990년 8월 2일 전격적으로 쿠웨이트를 침략·점령하여 이라크 열 아홉 번째 속주로 삼아 통치권 행사에 들어감.

- 이에 따라 걸프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주도 아래 33개국의 다국적군이 형성되어 1991년 1월 17일 이라크를 침공하여 2월 28일 약 6주만에 사태가 해결되었음.

나)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

□ 미국경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로 침공하기 이전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라크의 침공을 계기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었음.

- 1983년 이후 3.4%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던 미국경제는 연준리의 고금리정책(연방기금금리 8.25%) 등에 의해 1990년 2/4분기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표 10> 걸프戰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단위: %)

	1990 I	II	III	IV	1991 I	II	III	IV
실질 GDP	5.1	0.9	-0.7	-3.2	-2.0	2.3	1.0	2.2
개인소비지출	3.3	1.2	1.5	-3.3	-1.8	3.0	1.3	-0.8
총민간국내투자	4.9	-0.4	-8.5	-24.9	-15.3	-3.1	10.8	17.7
정부지출	6.2	1.0	0.0	4.0	1.8	1.2	-1.7	-1.7
국 방	1.2	-1.0	-6.7	7.0	4.1	-1.8	-9.6	-12.9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이후 국제원유가가 급등하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 그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다 걸프전이 종료된 후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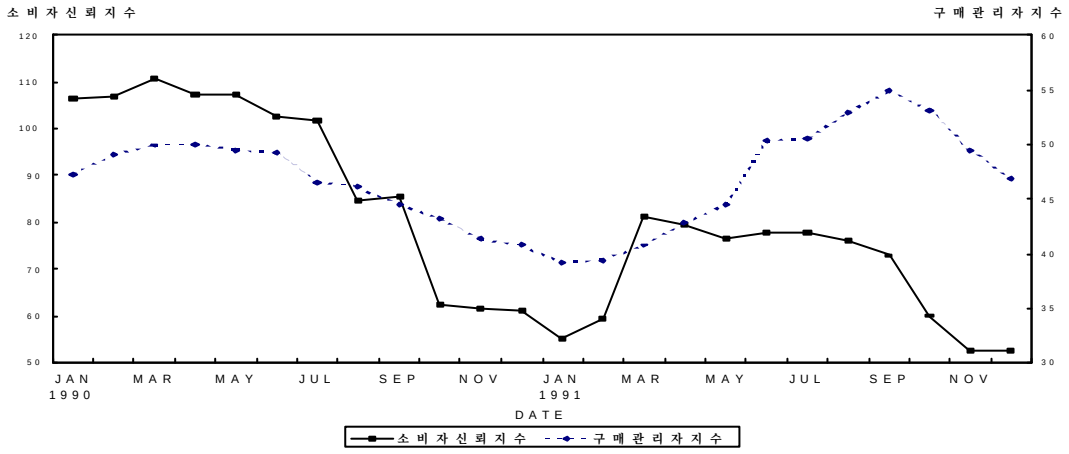
- 국방 관련 정부지출 역시 걸프전 준비기간과 수행기간인 1990년 4/4분기와 1991년 1/4분기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일반적으로 전쟁과 같은 외부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경제주체의 심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신뢰지수와 구매관리자지수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이후 급락함을 볼 수 있음.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직전인 1990년 7월 101.7이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이라크의 침공과 더불어 1991년 1월 55.1을 기록하며 45.8% 하락하였음.

<그림 4> 걸프戰에서의 소비자 및 생산자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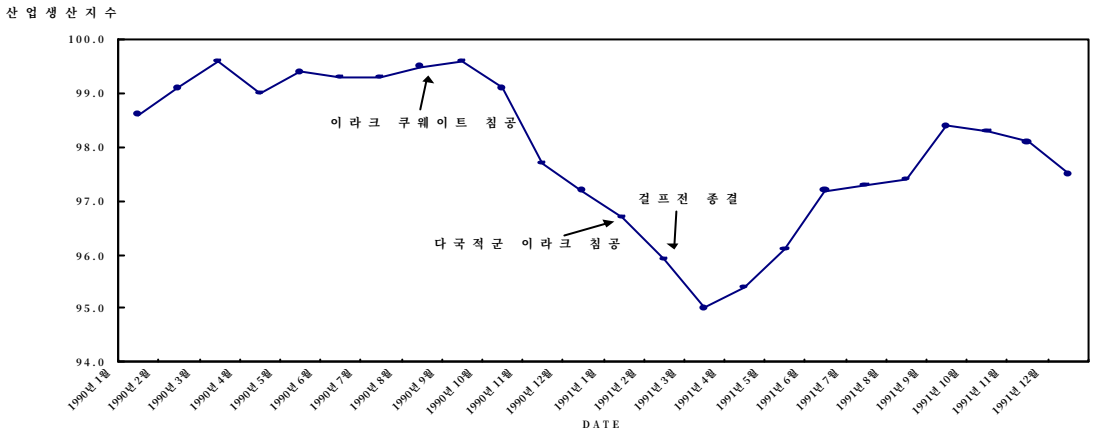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경우 경기둔화조짐이 나타나던 1990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라크의 침공으로 낙폭이 더욱 확대되어 침공 이후 15.9% 하락하였음.

□ 그러나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투입되자 소비 및 생산 심리가 곧 회복되어 1991년 2월 소비자신뢰지수 및 구매관리자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여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소비 및 생산심리의 위축은 산업생산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걸프전이 해결되자 양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여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그림 5> 걸프전과 산업생산지수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다) 금융시장동향

□ 걸프戰이 1991년 1월 17일 발발한 이후,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를 보이다 2월 10일을 전후하여 달러강세로 전환되었음.

- 이러한 달러 강세는 걸프戰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확산되었음.

<표 11> 주요 환율의 변동 추이

	1991.1.3	1991.1.17	1991.2.1	1991.2.28	1991.4.1
원/달러환율	719.50원	721.30원	721.50원	727.2원	727.50원
엔/달러환율	133.05엔	132.88엔	131.45엔	132.95엔	140.20엔

자료: Bloomberg

□ 걸프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던 세계 주요 주식시장의 주가는 전쟁 발발 후 한국시장만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미국, 일본, 영국의 주식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음.

-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형성하는 등 준비기간이 오래 걸린 반면, 전쟁의 시작은 모든 투자가들에게 이번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

- 즉 전쟁준비 기간 동안에는 투자심리가 위축된 반면, 전쟁 발발로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견되자 투자심리는 호전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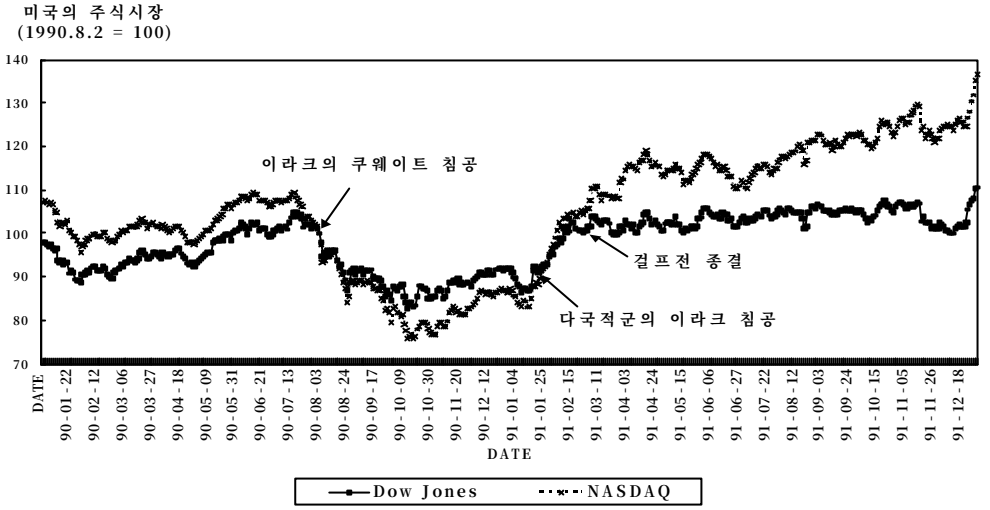
<표 12> 주요국의 주가 변동 추이

		1991.1.4	1991.1.17	1991.2.1	1991.2.28	1991.4.1
미국	다우존스	2566.09	2623.51 (2.24)	2730.69 (4.09)	2882.18 (5.55)	2881.19 (-0.03)
	나 스 닥	367.24	395.81 (7.78)	417.69 (5.53)	453.05 (8.47)	480.86 (6.14)
일 본		24069.18	23446.81 (-2.59)	23156.7 (-1.23)	26409.22 (14.05)	26007.4 (-1.52)
영 국		2126.10	2104.60 (-1.01)	2165.81 (2.91)	2380.80 (9.93)	2488.30* (4.52)
한 국		697.62	641.42 (-8.06)	632.53 (-1.39)	675.57 (6.80)	650.05 (-3.78)

주: * 는 4월 2일 자료임.
괄호 안은 전일 대비 증가율임.
자료: Bloomberg

□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침체되던 주식시장은 다국적군의 반격으로 급등하였으며 걸프전 종결과 함께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그림 6> 걸프戰 전후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 추이



라) 국제원유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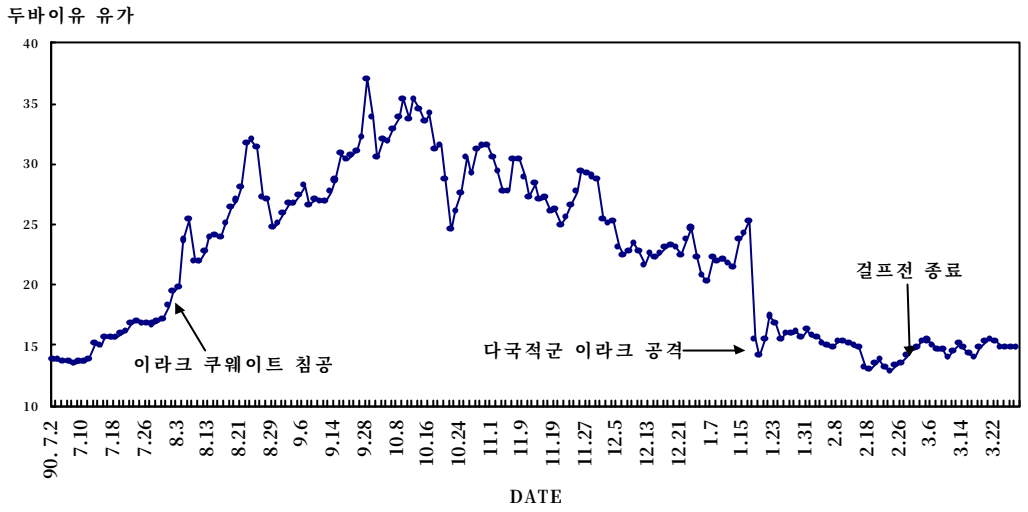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급등한 국제원유가는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 1990년 7월 배럴당 13달러 수준이던 국제원유가(두바이油)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더불어 급등하였는데, 침공일인 8월 2일 19.45 달러로 오른 뒤 9월 28일에는 37.04달러로 급등함.

- 25~35달러 사이에서 변동하던 국제원유가는 1991년 1월 16일 25.33달러를 기록한 뒤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1월 17일 하루만에 38.8%(9.83달러)가 하락한 15.50달러를 기록함.

- 이러한 급락은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루어진 것임.

<그림 7> 걸프전 동안의 국제원유가 변동 추이



주: 두바이油 기준.

마) 걸프전과 최근 상황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최근의 상황은 걸프전과 유사한 점을 내포함과 동시에 차이점 역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 각각 발생하였다는 것이 유사하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경기둔화 초기에 발생한 반면 9.11 테러사태는 경기둔화기 중반에 발생하였음.

- 사태발생 이후 국제원유가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된 것은 양 사태의 유사점임.

- 그러나 걸프전 발발 직전의 경기둔화는 소비지출의 둔화에 비롯되었고 생산성 증가율 역시 저조하였던 반면, 9.11 테러 이전 개인소비지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생산성 역시 '신경제' 현상의 지속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연준리의 금리정책에서도 대별되는데, 걸프전 이전 연방기금금리는 8.0%의 높은 수준이었고 9.11 사태 이전에는 3.5%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걸프전이 경기둔화 초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준리의 금리수준이 높았던 것임.

<표 13> 최근 상황과 걸프전의 유사점 및 차이점: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걸프전	최근 상황
차이점	사태발생 직전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1990년 2/4분기: 1.2%	2001년 2/4분기: 2.5%
	사태발생 시점의 연준리 금리정책	고금리(8.0%)	저금리(3.5%)
	사태발생 후 연준리 첫 금리인하 시점	88일 (8.2~10.29: 0.25%p)	6일(9.11~9.17: 0.5%p)
	사태발생前 생산성 연간증가율	1989년: 0.75%	2000년: 2.92%
유사점	· 미국경기 하강기에 발생(그러나 걸프전은 경기하강 초기에 발생한 반면, 9.11 테러사태는 경기둔화기 중반에 발생) ·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 사태발생 직후 금융시장 불안(주가 급락, 달러 약세) · 사태발생 직후 국제원유가 급등		

- 사태 발생 이후 연준리의 대응도 비교되는데, 9.11 테러 직후 연준리의 금리인하가 신속히 이루어진데 반해 걸프전에서는 이라크 침공 이후 첫 번째 금리인하가 88일 경과 후 단행되었음.

다. 이번 공습이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

1) 실물부문

□ 상기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전쟁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경로는 소비 및 투자심리를 통해서 이루어짐.

-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국방관련 정부지출의 증가 및 미국의 생산대체기지 역할 등으로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소비 위주

의 경제구조로 변화한 이후 전쟁 발발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의 변동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음.

- 투자심리의 위축은 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을 통해 그 영향이 나타나며, 소비심리의 위축은 개인소비지출과 그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침.

□ 결국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프간 침공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좌우될 것인바, 가능한 시나리오는 조기 수습, 장기전, 가능성은 낮지만 중동지역으로의 확전 등임.

- 걸프전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6주 정도의 전쟁을 통해 미국이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고 사태가 조기 수습된다면, 소비 및 투자심리는 곧 회복될 것이나 3/4분기 및 4/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임.

- 9.11 테러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빈 라덴(Osama bin Laden)에 대한 수색작업이 지연되고 산악지형을 이용한 아프간의 게릴라式 항전 등으로 사태해결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경제는 L자형의 경기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국제정치 역학 구도上 가능성은 낮으나 이라크 등 중동지역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경우 미국과 세계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큼.

□ 결국 조기수습의 경우 9.11 테러사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단기 외부충격이 될 것이나, 장기전 또는 확전의 경우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의 기본구조(Fundamental)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장기화될 것임.

<표 14> 시나리오별 전망

	시나리오 I: 조기수습	시나리오 II: 장기전	시나리오 III: 중동지역으로의 확전
소비 및 투자심리	· 조기회복	· 위축될 것이나 급격한 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	· 급격한 위축
미국경기전망	· 2001년 3/4, 4/4분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2002년 상반기 회복	· L자형의 경기둔화 지속	·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 지속
외환시장	· 달러화 반등 (엔화 및 유로화 약세)	· 달러화 약세 지속	· 달러화 약세 지속
주식시장	· 미국경기 조기회복 기대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상승	· 점진적인 주가 하락	·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로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하락
금리	·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투자자금의 이동으로 금리 상승	· 안전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국채 이자율 점진적 하락	· 안전자산인 채권수요중대로 금리하락
국제원유가 (두바이油 기준)	· 배럴당 25달러 내외	· 배럴당 25~3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변동	· 단기: 배럴당 32달러 이상 급등 · 사태해결 후: 배럴당 25달러 수준에서 안정

□ 이번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정책당국의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연준리의 신속한 대응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9.11 사태 이후 연준리는 주식시장이 재개되던 날(9월 17일) 아침 0.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지난 10월 2일 그리고 11월 6일 정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각각 추가 인하하여 유동성 확보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금년 연준리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4장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음).

○ 또한 연준리는 유럽중앙은행(500억 달러), 영국은행(300억 달러), 캐나

다은행(100억 달러)과 통화스왑협정을 맺어 달러의 유동성 확보에 대비함.

○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미 의회는 400억 달러 지출예산안을 가결하여 피해대비 정부의 보조금 비율이 91.7%에 이름.

<표 15> 최근 각종 사태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보조

(단위: 십억 달러, %)

사태	시점	경제적 손실(A)			경제적 보조(B)			경제적 손실 대비 보조 비율 (B/A)
		파괴	생산 손실	합계	보험	정부 보조	합계	
9.11 테러	2001. 9	**20.0**	**40.0**	**60.0**	**15.0**	**40.0**	**55.0**	**91.7**
LA 지진	1994. 1	15.1	9.4	24.5	2.5	11.6	14.1	57.6
중서부 홍수	1993 여름	4.5	7.0	11.5	1.0	5.2	6.2	53.9
Andrew 허리케인	1992. 8	16.6	8.4	25.0	10.5	7.8	18.3	73.2
캘리포니아 지진	1989. 10	6.8	3.5	10.3	1.0	4.9	5.9	57.3
Hugo 허리케인	1989. 9	6.3	3.0	9.3	2.7	2.0	4.7	50.5

주: 9.11 테러의 경우 생산손실은 추정 금액임.

자료: Economy.com

○ 또한 부시 행정부는 600~750억 달러의 추가 재정지출을 고려하고 있으나, 재정수지악화 및 장기채 금리하락 저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2) 금융부문

□ 이번 보복전쟁이 조기에 수습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화 또는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임.

- 걸프전에서 보여진 것처럼 사건해결이 가시화 된다면 금융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임.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며 달러화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 약세가 지속될 것임.

- 또한 중동지역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경우 미국 및 세계경제는 당분간 침체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금융시장 역시 크게 동요될 것임.

3) 국제원유가

□ 국제원유가는 중동지역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쟁 발발에 따라 불안정해지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 미국 및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유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원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나 전쟁 발발 및 중동지역의 직접적인 관련 가능성 등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또한 동절기에 대비한 원유확보가 대부분 국가의 관심사이므로 원유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쟁 발발은 국제원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됨.

- 국제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기 수습의 경우 국제원유가는 안정될 것이지만, 장기화되면 급등 없이 지속적인 유가상승이 예상되며 중동지역으로 확전될 경우 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임.

4) 산업별

가) 국방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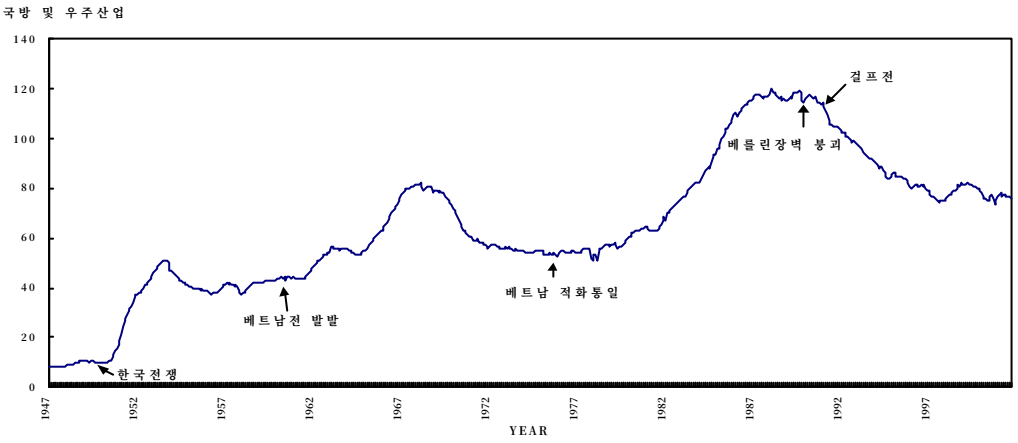
□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걸프전 역시 脫냉전시대로 인한 국방산업

의 하향세를 바꾸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돼, 이번 전쟁으로 인한 군수산업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미국의 국방산업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고비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음.

- 1990~91년의 걸프전 이후 국방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으며 탈냉전시대로 인해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였음.

<그림 8> 국방 및 우주산업의 생산지수: 1947년 이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이번 보복전쟁으로 인해 군수산업의 경기는 최근 수 년보다 나아질 것이나, 누리게 될 특수는 제한적일 것이며 1980년대와 같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나) 제조업

□ 9.11 테러사태 발생 이전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향후 경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소비자 및 생산자의 심리에 좌우될 것임.

- 9.11 테러 이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철강, 어패럴 등 일부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였으나, 8월 통계(9. 17 발표)에서는 섬유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추세는 9.11 테러 사태로 인해 소비 및 생산심리가 위축되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보복전쟁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다) 정보기술(IT) 산업

□ 2001년 초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IT 산업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전 분야에 걸쳐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군수산업의 부분적 특수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됨.

- 테러사태로 인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복구에 따라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나, 올 들어 지속되어온 투자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보복전쟁으로 인한 국방산업의 특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IT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임.

- 따라서 IT 산업의 경기는 이번 보복전쟁의 전개과정보다는 새로운 기술(예를 들면 무선 인터넷, 3G 무선이동통신)의 상업화 여부에 좌우될 것임.

라) 서비스산업

□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에 따라 유통, 항공, 금융서비스 등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유통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소비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항공여행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항공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임.

  ○ 또한 테러사태의 피해자들이 항공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항공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또한 각 항공사는 71,000명 이상의 인력감축을 단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항공산업에 대해 150억 달러 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친 경쟁구조의 개편 및 항공여행수요의 회복 등이 항공산업 경기회복의 전제조건임.

- 이번 테러사태로 인해 보험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일부 보험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보험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5) 결론 및 기관별 경기전망

□ 이번 사태가 조기 수습되어도 올 3/4, 4/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임.

□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전이나 중동지역으로의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및 세계경제의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며 경기회복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16> 기관별 수정 경기전망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01년					200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J.P. Morgan	1.3	0.3	-1.1	-1.5	0.5	-0.5	3.0	4.0	4.0	3.0
UBS Warbug				-2.0	0.7	-1.0	3.0	3.2	3.5	-
Deutsche Bank				-1.5	-	0.5	3.0	4.5	4.7	-
Goldman Sachs				-2.5	-	0.5	2.0	3.0	3.0	-
Merrill Lynch				-1.0	1.0	2.2	4.5	4.8	4.8	2.0
DRI-WEFA				-1.8	1.1	1.6	3.6	4.7	4.6	1.6
Economy.com				1.4	1.3	2.3	2.7	4.0	4.6	2.1

제4장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및 방향

Ⅰ. 부시행정부의 내각 및 성향

가.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

□ 공화당 부시 후보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런닝 메이트로 짝을 이룬 딕 체니(Dick Cheney) 前 국방부장관이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음.

- 부시 후보가 지난 7월 말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체니를 부통령 후보에 지명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외교경험이 부족한 부시 당선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은 대다수 공화당원의 지지를 이끌어냈음.

- 또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체니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이며 국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시 당선자를 잘 보완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체니 부통령 당선자는 포드 前대통령(1974~77년)의 백악관실장을 역임하였고 부시(父) 대통령(1989~93년) 시절 국무부장관직을 수행하였음.

1) 보수 성향

□ 부시 후보가 딕 체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일부에서는 의외라는 지적도 있었음. 왜냐하면 부시 후보가 자신보다 덜 보수적인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임. 체니는 업무추진에 대해

훌륭한 평판을 지니고 있으나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실정임.

2) 자유 무역

□ 체니 부통령 당선자가 수행한 의회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그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됨.

-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 법안에 반대하였고 섬유 및 어패럴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법안을 반대하였음.

- 또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에 일정 비율의 미국 노동과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역시 반대하였음.

3) 외교정책

□ 일부 평론가들은 냉전시대에서는 체니의 외교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탈냉전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함. 외교분야에서 그의 기본 방향은 국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입주의인 것으로 분석됨.

- 의회에서 그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전략적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기금 축소 법안 역시 반대하였음.

- 또한 레바논 지역의 미군 주둔을 지지하며 현재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를 지지하고 있음. 이는 국방과 외교정책에 대한 그의 관점이 냉전시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국무장관: 콜린 파월(Colin Powel)

□ 1991년 걸프전을 이끌었던 前 합참의장 파월은 자신이 참전했던 베트남戰을 거울삼아 무분별한 군사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냉전 종식에 따른 군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보스니아, 코소보 등 국지적 분쟁 개입에 반대함. 불가피한 해외 군사개입의 경우 사활적 국익 관계, 국민의 지지, 성공 가능성, 철수를 포함한 명확한 전략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이른바 「파월 독트린(Powell Doctrine)」을 제시하였음. 일단 군사개입에 나서면 압도적 전력으로 속전속결 승전으로 이끌어야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사용 가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는 외교(Doability Doctrine)」를 표방해온 올브라이트 현 국무장관은 "사용하지 않으려면 최강 군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난함.

- 자메이카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1992년 대통령후보로도 거론되었으나 출마하지 않았음.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과 합참의장 등으로 레이건, 부시, 클린턴 등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하였음. 한국의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대대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가지고 있음.

다. 재무장관: 폴 오닐(Paul O'Neill)

□ 1935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출생한 폴 오닐은 프레스노 주립대학(Fresno State College, 경제학사)을 졸업하고, 클래어몬트 대학원(Claremont Graduate School)과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정을 거친 뒤에 인디아나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음.

- 1967년부터 10년간 백악관 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근무한 공직경력을 쌓은 이후 오닐은 현재까지 세계최대의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Alcoa)社의 회장직을 맡고 있음.

- 그는 특히 포드 행정부 시절인 1975년부터 카터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77년까지 예산실의 부실장을 역임하면서 직선적(straight-shooting)이고 솔직한 성품을 지닌 공직자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후 제지업체인 International Paper社의 부회장직을 시작으로 기업경영에 참가한 오닐은 1985년 同社의 회장을 거친 이후 1987년 Alcoa의 회장에 취임하게 됨.

□ 효율적이고 과감한 기업경영으로 알코아사를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업체로 키워낸 그의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오닐이 금융계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월가로부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오닐의 재정정책에 대한 성향이 부시의 전면적인 감세정책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함.

- 오닐은 연방재정 균형을 적극 지지하며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중시(Supply-Side)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1992년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휘발유세 인상 방안에 지지를 보냄.

□ 그러나 오닐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부시가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오닐 역시 부시의 경제정책 수행을 도와 미국의 경제성장 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커다란 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오닐은 포드 행정부 시절부터 그린스펀과 부통령으로 선출된 체니와도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장관 직무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오닐을 알코아사 회장으로 적극 추천한 사람이 그린스펀으로 알려져 있음.

- 오닐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그린스펀과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그린스펀이 통화정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라. 상무장관: 돈 에반스(Don Evans)

□ 텍사스 출신의 돈 에반스는 25년간 부시 대통령 당선자와 동갑의 막역한

친구 사이로 부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1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음.

- 텍사스 대학(UT)에서 기계공학사와 경영학석사 과정을 졸업한 그는 석유채굴 노동자로부터 시작하여 석유가스 회사인 톰브라운社(Tom Brown Inc.)의 회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1997년부터는 텍사스 대학의 이사장도 맡고 있음.

□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는 1989년 톰브라운사의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오른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부채삭감 노력을 통해 가스채굴에 집중 투자하는 경영능력을 발휘하였음.

□ 공직경험이 전무하다는 약점을 기업 최고경영자와 대학이사장의 경영능력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 그는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마. 농무장관: 앤 베네맨(Ann Veneman)

□ 미 연방정부 사상 첫 번째 여성 농무장관으로 지명된 앤 베네맨(51세)은 변호사 출신으로 연방과 주정부의 농업 및 식품전문가로 광범위한 농무행정을 경험하였음.

-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C at Davis)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버클리 대학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스팅스 법대(Hastings College of Law)를 졸업하였음.

- 1999년부터 현재까지 새크라멘토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녀는 1986년부터 7년간 국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을 포함하여 기타 고위관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 식품농업장관을 역임(1995~99년)한 바 있음.

□ 많은 농무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녀는 실용주의적인 한편, 필요한 경우엔 과감한 추진력도 지니고 있어 농무장관직을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

는 기대를 높이고 있음.

- 앤 베네맨은 농무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출하여 공동의 상식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바. 주택·도시개발장관: 멜 마르티네즈(Mel Martinez)

□ 멜 마르티네즈(54세)는 현재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의 郡守로 쿠바 출신의 첫 번째 각료로 지명되었음. 15세 때 쿠바를 탈출한 그는 플로리다 주립법대를 졸업하고 Orlando Utilities Commission 의장과 올랜도 주택국장(chairman, Orlando Housing Authority)을 지냄.

- 그는 부시 대통령당선자의 동생 젭 부시(Jeb Bush) 플로리다 주지사의 측근으로 대선기간중 부시의 주선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였음.

□ 마르티네즈의 주택·도시개발장관 지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마르티네즈는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피력하고 개방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함.

사. 로렌스 린지(Lawrence B. Lindsey)

□ 린지는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되며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됨.

- 현재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재직 중인 린지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에서 조세정책을 담당하였으며 부시(父)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책개발 특별보좌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하였음. 그 후 FRB에서 소비자 및 지역문제를 연구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당선자의 주요 조세관련 공약은 린지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세정책 수립에 관여할 것

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일본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재설정과 관련된 자문 역할에도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아. 백악관 실장: 앤드류 카드(Andrew H. Card Jr.)

□ 지난 11월 29일 부시 당선자는 백악관실장으로 카드 前교통부장관을 지명함. 그는 부시 일가의 최측근으로 한때 부시(父)의 part-time 운전수까지 지낸 인물임. 이번 대통령선거 동안에도 공화당 전당대회(7. 31~8. 3)를 주관하기도 하였음.

- 부시(父) 행정부 시절 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카드는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시측의 인수인계팀을 이끌기도 하였음. 또한 제네럴 모터(GM) 부사장,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Americ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회장 등을 역임하였음.

- 카드는 지난 1997년 미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교역을 문제삼아 수퍼 301조를 발동할 당시 AAMA 회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강경조치를 주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경력으로 카드의 백악관실장 임명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함 (조선일보 11월 29일자 참조).

- 그러나 한미 무역관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이 주관할 일이며 백악관비서실장이 한미무역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한미 무역관계는 누가 미국무역대표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임. 그리고 현재 6명의 ITC위원 중 의장을 포함한 4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므로 부시 당선자가 인선을 고려하여야 하는 입장임.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 의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느냐가 백악관실장의 성향보다 더욱 중요할 것임.

- 카드 백악관실장 내정자의 역할은 부시 당선자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비서관들과 내각의 업무 협조 및 수행이 무리 없이 운영되도록 조율하는데 있다고 분석됨.

<표 17>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

부 처	각 료
부통령(Vice President)	Richard B. Cheney
농무부 (Dept. of Agriculture)	Ann Veneman
상무부 (Dept. of Commerce)	Don Evans
에너지부 (Dept. of Energy)	Spencer Abraham
주택-도시개발부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Mel Martinez
노동부 (Dept. of Labor)	Elaine Chao
국무부 (Dept. of State)	Colin Powell
재무부 (Dept. of Treasury)	Paul O'Neill
미국무역대표부 (USTR)	Robert Zoellick
경제자문회의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R. Glenn Hubbard
백악관 비서실장(Chief of Staff)	Andrew Card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 (National Economic Council:NEC)	Lawrence B. Lindsey

2. 기본 방향

가. 작은 정부

□ 새로운 부시 행정부는 각종 경제 이슈에 대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initiative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공화당의 기본 강령이며 각 개인의 권리보호와 책

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경제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세감면 등을 통하여 개인의 경제활동범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 방향임.

○ 따라서 교육제도, 보육제도, 의료제도, 은퇴 후 복지제도 등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강화보다는 조세인하와 개인저축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빈민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은 자의 노동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조건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나. 시장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의 원칙은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라는 것이 공화당의 견해임.

- 이 원칙은 '작은 정부'라는 첫 번째 기본 노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려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차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시(父)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부 보조금이 기업간의 자율경쟁과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보조금의 폐지를 주장하였음.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수출보조금은 폐지하되 R&D투자 등 몇몇 분야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함.

- 따라서 공화당의 부시 新행정부는 산업정책에 있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한 경제활동의 제고가 기본 방향이 될 것임.

다. 자유무역

□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기본 노선은 자유무역임.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부시 당선자는 자유무역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멕시코를 예로 들면서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경제발전 및 개혁을 이루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세계로 전파시킬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1999년 12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부시는 기존 통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자유무역의 추진'이라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통상부문과 관련하여 新행정부의 첫 과제와 목표는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 전망됨.

3. 조세 및 재정정책

□ 부시 행정부는 이전 클린턴 행정부가 긴축재정 정책을 지속하였던 것과는 달리 재정흑자분을 처리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세감면정책과 경기침체기를 맞아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음.

-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4%대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은 지난 1998 회계연도부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미국이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어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의 건전한 흑자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가. 전면적인 조세감면정책

□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전에서 내걸었던 공약대로 부시 행정부는 재정흑자분을 전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road Tax Cut) 정책의 시행에 사용하였음.

-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작은 정부론' 및 '시장경제체제' 등과 같은 공화당의 기본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음.

1) 조세감면정책의 내용

□ 미 부시 대통령은 6월 7일 조세감면정책 법안인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조정법률(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이하 EGTRA)'에 서명함.

- 미 의회 통과(5. 26)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친 조세감면 법안은 당초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1조 6,000억 달러보다 2,500만 달러 삭감된 1조 3,500억 달러 수준이지만 지난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추진하였던 감세정책 이후 최대의 감세규모로 평가되고 있음.

- EGTRA는 개인소득세율 구조의 개편과 세율인하, 맞벌이 부부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상속·증여세율의 인하와 상속세의 폐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광범위한 조세감면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바,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임.

가) 개인소득세율 체계의 개편과 단계적 세율인하

□ 부시 행정부 조세감면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소득세율 체계의 변화와 세율인하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현행 세율 15%의 과세계층(tax bracket)을 세분하여 새롭게 세율

10%의 과세계층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동 법안에 따르면 10%의 세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인 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6,000달러 이하인 독신자(single individuals), 10,000달러 이하의 세대주(heads of households) 및 12,000달러 이하의 부부합산소득 신고자(married couples filing joint returns)에 대하여 10%의 소득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임.[1)]

- 현행 세율 15%의 과세계층의 일부에 대해 세율 10%의 과세계층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세율격차에 의한 세금환급을 2001년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즉, 독신자의 경우에는 최고 300달러, 세대주 및 부부합산 소득신고자의 경우에는 각각 500달러, 600달러의 세금환급[2)]이 이루어지는데 재무부는 금년 10월 1일 이전에 이상과 같은 세금환급분을 모든 납세자에게 수표로 지급할 계획임.

- 한편, 현재 28%, 31%, 36%, 39.6%의 세율은 2001년 7월 1일부터 1% 포인트씩 인하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 2006년에는 각각 25%, 28%, 33%, 35%로 개편됨.

---

1) 현행 세법에 따르면 27,050달러 이하의 독신자, 36,250달러 이하의 세대주 및 45,200달러 이하의 부부합산 소득자에 대하여 15%의 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2) 예를 들어 과세소득 6,000달러의 독신자의 경우 현행 세법에 따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9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600달러의 세금만 납부하게되어 3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됨.

<표 18> 단계적 소득세율 인하 일정

	28%	31%	36%	39.6%
2001[1]~2003	27%	30%	35%	38.6%
2004~2005	26%	29%	34%	37.6%
2006 이후	25%	28%	33%	35%

주: 1) 2001년 7월 1일부터 발효.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UMMARY OF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FERRENCE AGREEMENT FOR H.R. 1836,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May 26, 2001

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규정

□ 현행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되는 500달러의 세액공제 규모를 향후 10년에 걸쳐 1,000달러로 두배 확대하기로 하였음.

- 또한 현행 세법상 소득세를 납부한 가계만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10,000달러를 넘는 가계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다) 부부합산 소득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새로운 조세감면안은 부부합산 소득 신고자(맞벌이부부)에 대한 감세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소위 'marriage penalty[3]'로 일컫는 결혼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3) 클린턴 행정부의 세제개편(1993)에 의해 납세자들은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과세소득이 합산되어 고세율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독신 때보다 조세부담이 가중됨. 이처럼 결혼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marriage penalty'라고 지칭함.

- 이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에 대한 표준공제 규모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부터는 독신자 표준공제의 두 배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라) 상속·증여세율의 인하와 상속세의 폐지

□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조세감면안에 따른 조세체계상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상속·증여세율의 인하와 상속세의 폐지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조세감면안에 따르면 현재 55%인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2002년부터 50%로 떨어지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는 45%로 인하될 계획이임. 이후 2010년에 상속세는 완전히 폐지되고 증여세만 최고 소득세율과 동일한 35%의 최고세율로 존속될 방침임.

2) 조세감면정책에 대한 평가

□ 부시 행정부 조세감면정책의 주요 내용인 세율인하와 상속세의 폐지가 일부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하며, 경기부양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회의적인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EGTRA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조세감면의 효과적인 실시로 경기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국면에 이를 경우 세수증가로 건전한 재정수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물론 EGTRA에 따라 금년내 모든 납세자들에게 세율인하에 따른 세금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로를 밟을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음.

나. 경기부양책 마련

□ 9.11 테러사태 이후 부시행정부는 피해복구 및 전쟁자금조달에 400억 달러, 항공산업지원에 50억 달러, 항공산업의 부채보증에 100억 달러 등 총 600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 그러나 연준리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부시행정부는 추가 조세감면, 재정지출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 지난 10월 24일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HR 3090)이 찬성 216, 반대 214로 어렵게 하원(공화 221, 민주 212, 무소속 2)을 통과하였음.

- 그러나 조세감면 위주의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발 속에 하원을 통과하여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공화 49, 민주 50, 무소속 1)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부시행정부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민주당은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보커스(민주, 몬태나)의원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위주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표 19>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 차이

(단위: 억 달러)

	상 원 (민주당안)		하 원 (공화당안)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각종 기업세 감면	기업투자 10% 경비처리 허용, 세금납부만기연장	210	기업투자 30% 경비처리 허용, 기업 최소한세 폐지	707.7
개인 납세자 조세감면	조세환급	140	조세환급, 세율인하 조기시행, 자본소득세율 인하	285.92
조세감면 합계	350		993.62	
각종 재정지출	실업수당 한시증액 등	350	9.11 테러로 인한 실업 및 의료 혜택 지원	120
총합계	700		1,113.62	

다. 향후 재정수지 전망

□ 부시 행정부의 전면적인 조세감면정책과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현재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정부재정이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미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금년 9월 30일 종료된 미국의 2001 회계연도의 연방재정수지 흑자 폭은 2000 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 조세감면정책에 따른 조세환급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의 감소로 인해 2001 회계연도의 연방재정수지 흑자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1,100억 달러 감소된 1,270억 달러(GDP 대비 1.3%)를 기록함.

- 그러나 현재 부시 행정부가 경기침체기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당장 2002 회계연도부터 연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표 20> 미국의 연방 재정수지 추이(회계연도 기준)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재정수지 (십억 달러)	-290.4	-255	-203.1	-163.9	-107.5	-21.9	69.2	124.4	237	127
GDP 대비 비중 (%)	-4.7	-3.9	-3.0	-2.3	-1.4	-0.3	0.8	1.4	2.4	1.3

자료: 미 재무부(2001)

4. 통화정책

□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미 現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리)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음. 따라서 그린스펀이 연준리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기존의 정책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연준리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국경제의 연착륙, 물가 안정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연준리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한편 2000년 하반기부터 성장 둔화세로 전환되고 금년 3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9.11 테러사태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연준리 통화정책 사상 가장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음.

가. 금리인하 내용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리)는 12월 11일 정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주요 단기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와 재할인율(Discount Rate)을 각각 0.25% 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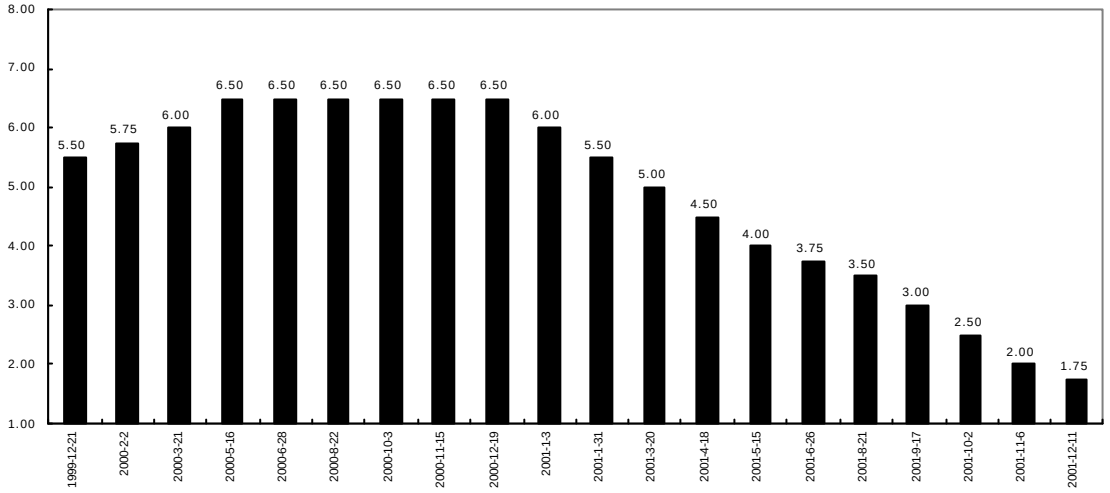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은행간 콜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는 2%에서 1.75%로, 재할인율은 1.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됨.

※ 연방기금금리: 연방기금시장은 연방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 중 초과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은행간에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단기금융시장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연방기금금리임.

※ 재할인율: 정부채권을 담보로 일반은행이 연방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연방은행이 부과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임.

<그림 9> 최근 연방기금금리 추이

(단위:%)



자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이번 연준리의 금리인하 조치는 금년 들어 총 11번째, 9.11 테러사태 이후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하 폭만 4.75% 포인트에 달하며 연방기금금리는 이제 4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음.

- 세 번의 임시회의를 포함한 금년 금리인하는 연준리 통화정책 사상 가장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해로 기록될 만함.

○한 해에 10차례 이상의 금리인하는 경기침체기인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임. 연준리는 1991년 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번의 금리인하 조치를 취함. 그러나 이 기간에 이루어진 연방기금금리 인하 폭은 3% 포인트(7%→4%)로 금년 인하 폭에는 크게 뒤지는 것이었음.

<표 21> 1990년대 초와 최근 경기침체기의 금리정책 비교

	1990년대 초	최 근
경기침체기	1990년 7월(정점)~1991년 3월(저점): 8개월간	2001년 3월(정점)~현재
금리인하정책 개시 시기 및 인하폭	1990년 7월 13일 (0.25%p)	2001년 1월 3일 (0.5%p)
금리인하 당시 경제상황	1990년 3/4분기~1991년 1/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2001년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
산업생산지수 하락 시점	1990년 10월	2000년 10월
비농업고용인구 하락 시점	1990년 7월	2001년 4월
4.75%p 인하 경과시간	24개월(1990년 7월~1992년 7월: 8.25%→3.25%)	12개월(2001년 1월~12월: 6.5%→1.75%)

주: 연방기금금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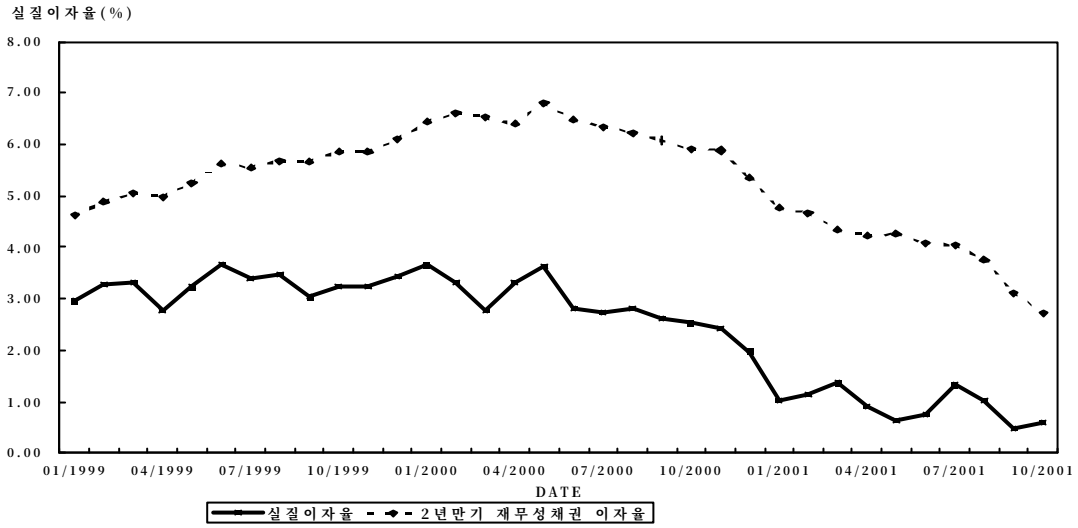
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 실질이자율이 현재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된다면 연준리는 추가 금리인하도 단행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인 단기금리를 나타내는 2년 만기 국무성채권 이자율이 10월 현재 2.73%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기준)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단기금리 기준)은 0.63%임.

○ 또한 10월 현재 6개월 짜리 양도성예금(CD)의 실질이자율도 0.16%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음.

<그림 10> 실질이자율 변동추이



- 그러나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됨.

○연초 4%에 육박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에너지가격의 안정과 경기과열의 퇴조로 7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저금리정책의 지속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내재되어 있어 실질이자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에 즉각 실질이자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금년 한해 통화정책 사상 유례없는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운용하였던 연준리는 2002년에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 또다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음.

- 2002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 1. 29~30, 3. 19, 5. 7, 6. 25~26, 8. 13, 9. 24, 11. 6, 12. 10

5. 국제금융정책

가. 환율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환율정책은 미 연준리에서 전담할 예정임. 통화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미 연준리 의장인 그린스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新행정부의 환율정책은 비개입주의를 표방하며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리라 전망됨.

□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을 분석해보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흑자가 감소하거나 또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자율 인상이 예상됨. 이러한 고금리는 한국의 부채상환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나. 아시아 위기와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 90년대 후반 일어난 아시아 경제의 위기가 세계 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

□ 공화당은 국제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급변하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개혁과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등을 역설하는 입장임.

□ 공화당은 국제금융부문에 대해 정보화 시대와 금융시장의 세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검

토 및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우선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운용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운용이 요구됨.

- 또한 국제금융시스템의 재정과 신뢰도 약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방지에 힘써야 할 것임.

- 부시 당선자의 경제 및 외교 참모 중 하나인 젤릭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관료적 자만(Technocratic Hubri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 및 채무국가들의 정부 혹은 민간 금융부문의 적절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국제금융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지나치게 국제금융기관의 관료적 해법에 의존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해당 정부와 국제금융기관간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부시 당선자는 IMF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미리 차단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6. 통상정책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통상정책은 국내 문제에 가려져 큰 이슈가 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한국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통상분야이므로 이를 먼저 분석하기로 함.

가. 무역촉진권한

1) 무역촉진권한의 배경 및 역사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은 과거 Fast-Track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이는 미국의 통상외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었음.

- 미국 헌법은 대외 통상교섭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합의한 이후에도 미국 의회는 내용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음. 이는 종종 미국 정부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낳곤 했었음.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신속처리권한임.

- 행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 뒤, 미국 의회는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단지 '可否 투표'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음.

- 1979년 도쿄 라운드, 1988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1992년 북미자유무역지역협정(NAFTA),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등이 이 권한에 따라 타결된 주요 협정들임. 이 권한은 지난 1974년 제정된 한시법(20년)의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며, 1994년 4월 시효가 만료되었음.

- 클린턴은 미국 업계 및 통상관련 부처들의 요구에 따라 1997년 9월 이후 통상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이 법안의 부활을 시도했지만 1997년 11월 10일 노동조합, 환경단체, 공화당 등이 반대하였고 자신이 속해있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여 결국 하원에서 과반수인 218명의 표 획득에 실패, 법안 상정을 철회한 적이 있음.

  ○ 클린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세력은 클린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었음. 원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 통상 조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 측은 특히 1998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 같은 당 소속의 클린턴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을 섰음.

○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1998년 선거의 주요 자금줄인 노동조합의 입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었음. 국제무역 증가에 따라 입지를 위협 당한다고 여기고 있던 노조 측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각종 무역협정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신속처리권한의 부활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왔음.

○ 또한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일부 강경 보수의원들이 외국에 대한 원조 문제와 이를 연계, 과반수 확보를 좌절시켰음.

2) 도입여부 전망

□ 부시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의 수권을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의 우선과제로 간주하고 이의 의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음.

- 9.11 테러사건 직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처리권한을 잠시 무시하였지만, 10월에 들어와 부시 행정부는 무역의 활성화가 미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역촉진권한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였음.

- 최근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인 미국으로서는 이 권한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남미지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 권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무역촉진권한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으나 아직 조기 제정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함.

- 지난 12월 6일 미 하원은 공화당의 지지로 215:214의 한 표차로 무역촉진 권한 법안(H.R. 3005 The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1)을 승인함.

- 또한 상원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도 18:3으로 동 법안을 승인함.

- 동 법안이 과거 공화당案보다 노동과 환경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주당 의원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동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양당간 많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공화당이 9.11 이후 큰 피해를 본 일부 산업의 노동자들의 보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보장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나. WTO 뉴 라운드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정책

1) WTO 시애틀 각료회의의 무산

□ 1999년 11월 30일 미국의 시애틀에서 뉴 라운드(New Round) 협상 출범을 위한 WTO 각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의 시위로 예정된 공동선언이 무산된 채 분야별 협상이 2000년으로 연기되었음.

- 이에 앞서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도 WTO 회원국 대표들이 최대 난제인 농업 보조금 문제와 기존 무역협정 이행 방안 등에 이견이 있어 의제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또한 환경-노동 분야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미국 산업별 노조(AFL-CIO)를 비롯한 수 천 명의 노조 운동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미국 국내 실업의 증가를 우려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음.

- 미국의 인권단체들도 중국은 WTO 가입에 앞서 노동 개조소 해체, 티베트와 신장지역의 인권조사 허용을 통해 더욱 책임 있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 전미 트럭노조와 유럽 환경단체들은 불공정무역의 원천인 개도국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고,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은 그런 행동이 자유무역협상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음.

- NGO들은 뉴 라운드가 인간과 자연을 무시한 채 경제적인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고 주장하고, 자유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을 가진 세계경제 질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개도국의 빈민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2) WTO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뉴 라운드 출범

□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는 뉴 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사실 그 동안 농업과 환경분야에 대한 미국과 EU의 의견 차이가 컸으며, 개도국 역시 예전에 비해 자기 목소리를 강력히 내기 시작하면서 뉴 라운드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 그러나 9.11 테러사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테러사태에 대항하여 연대하는 국제정치환경이 조성되어 뉴 라운드 출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를 교훈삼아 WTO 회원국들이 성공적인 뉴 라운드 출범을 지지하였으며,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를 연장하면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신축적인 협상자세를 보임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또한 최근의 세계경제침체와 테러사태로 인한 국제무역의 위축을 뉴 라운드 출범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성공적인 출범에 도움이 되었음.

3)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정책

가) 기본 입장

□ 부시행정부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가 형성되자, 자유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자유경제질서의 확립은 국제기구의 설립에 의해 완성되었음.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現 World Bank), 그리고 관세 및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이 그것임.

- 이러한 체제는 1950~70년대까지 비교적 충실히 유지되어왔음.

○ 김남두(1990)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1)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 (2) 미국경제의 낮은 해외부문 의존도와 그에 따른 국내경제의 독자생존 가능성, (3) 지속적인 미국경제의 성장, (4)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외교성향 등임.

-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일본 및 독일 경제가 급성장 하게되고 1980년대 후반에는 공산진영의 몰락이 가시화 되자, GATT 체제를 확대하고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공화당 정부(레이건 및 부시(父)행정부)에 의해 주도된 우루과이라운드가 민주당 정부(클린턴 행정부) 아래에서 성공리에 체결되는 등 다자무

역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있어 양당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음.

○ 즉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GATT의 시스템과 기능만으로는 향후 세계무역이슈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당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임.

○ 이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무역기구가 탄생하여 다자무역체제가 개편되었던 것임.

나)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 다자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선 이 시스템의 확대가 추진되었는데, 가입국수가 142개국으로 늘어난 국제무역기구는 15년이나 끌어오던 중국과 대만의 가입을 제4차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음.[4)]

- 중국을 국제무역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 미국은 오랫동안 노력하였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국의 국제무역기구 가입을 양 후보 모두 지지하였음.

○ 노동권 및 인권보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중국의 국제무역기구 가입을 반대하던 의원들(주로 민주당 소속)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초당적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는 국제정치경제 구도 속에서 중국이 급성장 하는 것을 규범 중심의 다자무역체제內에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목적 역시 고려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및 동구권의 가입 역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4) 142개 가입국수는 2001년 7월 26일 현재 수치인바, 중국과 대만은 각국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국제무역기구 회원국이 된다.

다)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 이러한 다자무역체제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역시 미국의 초당적인 관심사임.

- 이번 국제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은 일부 개도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음.

○ 이번 각료회의 결과 뉴 라운드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규범 개정, 싱가포르 이슈(경쟁, 투자,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광범위한(broad and balanced) 의제를 다루기로 합의하였음.

○ 이와 같은 협상의제의 확대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국제무역기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다자무역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와 같은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는 부시행정부가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 아래 추진될 사안인바,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슈퍼301 보고서"[5]에서도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다. 무역 제재

□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포착되었을 때 미국정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음. 첫 번째는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일방적인 제재(Unilateral Sanctions)이고 두 번째로는 WTO 등 국제기구를 이용한 다자간 제재(Multilateral

5) USTR(2001) 참조.

Sanctions)가 있음.

-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대처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임.

- 그와 동시에 스페셜 301, 슈퍼 301 등 일방적인 제재 조치 역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新행정부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제재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나 일방적인 제재 수단을 더욱 선호하리라 전망됨.

-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자, 농업, 철강 등 미국의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로비와 캠페인 등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미 의회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당선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 또한, 부시 당선자의 경제 참모 중 하나인 로버트 젤릭에 따르면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시 당선자가 Section 201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함. 따라서 주요 교역국과 무역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큼.

라. 버드(Byrd) 수정안

1) Byrd 수정안의 통과와 배경

□ 2000년 10월 11일 Byrd 수정안이 찬성 340對 반대 75로 하원을 통과하였음.

- Byrd 수정안은 이 법안을 제안한 Robert Byrd 상원의원(민주당, West Virginia)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벌칙으로 부과하는 반덤핑 그리고 상계 관세로 발생하는 정부 세수를 미국의 제소기업체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 10월 18일 상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정안이 농업세출법안에 첨부되어 86對8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음.

□ 이러한 Byrd 수정안은 외국의 덤핑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업계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중립화한다는 것이 제안 배경임.

2) 각국의 반응과 무역마찰 전망

□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업체들의 반덤핑·상계 관세 제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00년 11월 13일 베들레헴 LTV 스틸 다이나믹스(Bethlehem LTV Steel Dynamics) 등 미국 9개 철강업계와 철강연합노조는 중국 등 열연강판 덤핑 수출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무부에 반덤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였음. 중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네덜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11개국의 제품이 제소되었으며 한국산은 제외되었음.

□ 이 법안에 대해 최근 일본은 EU나 한국 등과 더불어 WTO에 제소할 뜻을 분명히 밝힘. 2000년 10월 23일 주미일본대사인 Shunji Yanai는 만일 미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찬성표가 2/3를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

□ 이 법안의 문제점은 관세수입의 민간기업 증여가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임.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국제적

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행정부 역시 Byrd 수정안이 공정 무역을 해치고 외국의 경쟁적인 유사 제도도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 이러한 법안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新행정부 출범 후 이 법안과 관련된 무역마찰이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

3) 新행정부의 예상 대응

□ 부시의 新행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력화할 대체 법안을 준비하리라 전망됨.

- 이 법안이 제기된 배경 역시 정치적임. West Virginia에는 많은 철강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음. 이 지역의 상원의원인 버드는 일종의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만일 부시의 이 법안 무력화 노력이 경상수지적자 누적에 따른 국내 보호무역주의적 분위기에 막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한미간 무역마찰이 증대되리라 전망됨.

제5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Ⅰ. 최근 한미 경제현안 및 전망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양국간 교역구조

□ 한미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376억 달러, 대미수입은 292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음.

- 그 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적자 해소문제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음.

-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원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998년부터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로 반전되었음.

- 한국의 총수출 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39.98%를 정점으로 1997년 15.88%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 21.83%를 기록하여, 일본(11.88%), 중국(10.71%) 등을 제치고 미국은 한국 제일의 수출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총수입 중 대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여 년 동안 20%를 상회하다 2000년에는 18.2%를 기록해, 미국은 일본(19.8%)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음.

- 1996년 1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대미무역수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1998년에 흑자로 반전되었음.

○ 2000년에는 무역수지흑자 규모가 83.7억 달러인바, 한국의 교역국별 무역수지흑자 규모를 살펴볼 때 미국은 홍콩(94.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무역수지흑자 대상국임.

<표 22> 한미 양국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대 미 수 출		대 미 수 입		대 미 무 역 수 지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80년	4,606.6	26.3	4,890.2	21.9	-283.6
1985년	10,754.1	35.5	6,489.3	20.8	4,264.8
1990년	19,360.0	29.8	16,942.5	24.3	-4,827.9
1995년	24,131.5	19.3	30,403.5	22.5	-6,272.0
2000년	37,610.6	21.8	29,241.6	18.2	8,369.0

자료: KOTIS(http://www.kotis.com/)

2) 품목별 교역관계

□ 한미 양국간 품목별 교역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류, 완구류 등의 대미수출이 급속히 감소한 반면, 기계류, 수송장비 및 부품, 전기전자, 반도체 등이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 품목으로 등장하였음.

- 특히 1990년 전체 대미수출 중 25% 이상 차지하던 의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6.9%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친 반면, 10% 내외이던 기계류의 대미수출 비중은 2000년 25.1%로 높아져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음.

<표 23> 주요 품목 대미수출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명	1990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기 계 류	2,077.7 (10.7)	3,113.8 (12.9)	3,427.7 (15.8)	3,598.1 (16.6)	3,556.5 (15.6)	6,001.7 (20.36)	9,451.0 (25.1)
수송장비 및 부품	2,327.4 (12.0)	2,593.6 (10.8)	2,499.8 (11.5)	2,781.3 (12.9)	2,621.0 (11.5)	4,422.8 (15.0)	6,262.4 (16.7)
전 기 전 자	2,691.8 (13.9)	4,779.6 (19.8)	3,884.4 (17.9)	2,766.9 (12.8)	3,040.8 (13.3)	4,511.1 (15.3)	6,192.5 (16.5)
반 도 체	1,683.7 (8.7)	6,574.4 (27.2)	5,490.8 (25.3)	5,602.4 (25.9)	5,214.2 (22.9)	5,586.6 (19.0)	5,468.3 (14.5)
의 류	5,005.4 (25.9)	2,283.8 (9.5)	1,873.1 (8.6)	1,912.2 (8.8)	2,247.3 (9.9)	2,398.8 (8.1)	2,594.0 (6.9)
철 강	1,021.9 (5.3)	987.0 (4.1)	944.8 (4.4)	1,040.9 (4.8)	1,734.9 (7.6)	1,454.0 (4.9)	1,573.4 (4.2)
섬 유	481.7 (2.5)	678.9 (2.8)	773.8 (3.6)	949.4 (4.4)	909.4 (4.0)	961.6 (3.3)	1,042.2 (2.8)
석 유 화 학	367.6 (1.9)	491.9 (2.0)	536.5 (2.5)	586.8 (2.7)	662.6 (2.9)	710.0 (2.4)	838.4 (2.2)
임 산 가 공 물	92.9 (0.48)	96.1 (0.40)	74.1 (0.34)	117.2 (0.54)	235.1 (1.03)	252.5 (0.86)	348.8 (0.93)
조 선	7.9 (0.04)	258.7 (1.07)	41.9 (0.19)	4.4 (0.02)	52.1 (0.23)	311.2 (1.06)	334.9 (0.89)
수 산 물	137.7 (0.71)	86.1 (0.36)	72.9 (0.34)	61.8 (0.29)	52.2 (0.23)	63.4 (0.22)	63.9 (0.17)
완 구 류	321.7 (1.66)	43.4 (0.18)	42.6 (0.20)	44.2 (0.20)	45.4 (0.20)	46.8 (0.16)	57.9 (0.15)
곡 물 류	19.5 (0.10)	32.3 (0.13)	38.9 (0.18)	40.6 (0.19)	38.7 (0.17)	46.3 (0.16)	50.1 (0.13)
기 타 농 산 물	36.9 (0.19)	33.2 (0.14)	30.4 (0.14)	32.9 (0.15)	38.7 (0.17)	41.6 (0.14)	47.4 (0.13)
육 류	0.17 (0.001)	0.22 (0.001)	0.83 (0.004)	0.17 (0.001)	0.05 (0.000)	0.23 (0.001)	0.16 (0.000)

주: ( )안은 품목별 비중.

자료: KOTIS(http://www.kotis.com/)

- 그 외 수송장비 및 부품, 전기전자, 반도체, 철강 등도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농산물을 비롯한 일차산업 제품의 경우 큰 변화 없이 미미한 대미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24> 주요 품목별 대미수입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명	1990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반 도 체	1,146.9 (6.8)	3,116.9 (10.3)	3,608.9 (10.8)	4,894.9 (16.3)	5,447.9 (26.7)	6,999.9 (28.1)	7,111.1 (24.3)
기 계 류	3,498.9 (20.7)	6,810.3 (22.4)	7,977.6 (24.0)	6,469.3 (21.5)	3,047.7 (14.9)	4,370.7 (17.5)	6,626.7 (22.7)
전 기 전 자	895.9 (5.3)	2,648.2 (8.7)	3,192.2 (9.6)	3,229.2 (10.72)	1,677.2 (8.2)	2,487.6 (10.0)	3,672.4 (12.6)
석 유 화 학	1,540.8 (9.1)	2,462.2 (8.1)	2,450.5 (7.4)	2,347.5 (7.8)	1,558.9 (7.6)	1,782.6 (7.2)	2,117.4 (7.2)
수송장비 및 부품	1,627.7 (9.6)	3,970.6 (13.1)	3,918.7 (11.8)	2,860.4 (9.5)	1,498.3 (7.3)	1,384.2 (5.6)	1,357.9 (4.6)
임 산 가 공 물	1,276.2 (7.5)	1,508.7 (5.0)	1,323.9 (4.0)	1,099.1 (3.7)	657.5 (3.2)	795.0 (3.2)	947.6 (3.2)
기 타 농 산 물	390.0 (2.3)	808.9 (2.7)	898.4 (2.7)	885.9 (2.9)	698.2 (3.4)	725.0 (2.9)	784.9 (2.7)
철 강	788.9 (3.7)	1,182.3 (3.9)	1,049.5 (3.2)	944.4 (3.1)	516.9 (2.5)	645.3 (2.6)	716.2 (2.5)
육 류	120.1 (0.71)	407.7 (1.3)	380.9 (1.1)	375.0 (1.2)	220.3 (1.1)	385.8 (1.6)	605.4 (2.1)
곡 물 류	1,082.0 (6.1)	1,564.4 (5.2)	1,862.3 (5.6)	971.2 (3.2)	783.3 (3.8)	928.8 (3.7)	511.7 (1.8)
섬 유	632.5 (3.7)	658.2 (2.2)	583.4 (1.8)	504.7 (1.7)	454.1 (2.2)	275.6 (1.1)	296.1 (1.0)
수 산 물	130.7 (0.77)	139.1 (0.46)	170.2 (0.51)	127.1 (0.42)	79.7 (0.39)	127.2 (0.51)	146.8 (0.50)
의 류	54.0 (0.30)	82.0 (0.27)	122.7 (0.37)	95.2 (0.32)	26.8 (0.13)	34.7 (0.14)	40.2 (0.14)
조 선	108.1 (0.64)	7.6 (0.03)	11.5 (0.03)	7.0 (0.02)	3.2 (0.02)	16.3 (0.07)	5.3 (0.02)
완 구 류	3.6 (0.02)	11.7 (0.04)	16.7 (0.05)	11.8 (0.04)	2.9 (0.01)	7.4 (0.03)	7.3 (0.02)

주: ( )안은 품목별 비중.

자료: KOTIS(http://www.kotis.com/)

□ 한국의 대미수입은 반도체, 기계류에 집중되고 있는데, 1990년 6.8%에 불과하던 반도체 수입비중은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24.3%를 차지하였음.

- 기계류 수입은 'IMF 사태'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예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22.7%의 수입비중을 나타내었음.

- 일차 산품의 경우 육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임산가공물, 곡물류 등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별 교역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은 제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함.

○ 제조업의 대미수출은 99%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80%대를 유지하던 수입 역시 최근 들어 90%에 육박하고 있음.

<표 25> 산업별 교역비중 변화 추이

연도	대미수출			대미수입		
	농업	수산업	제조업	농업	수산업	제조업
1990년	0.4	0.7	98.8	18.3	0.8	77.8
1992년	0.4	0.6	98.9	13.9	0.8	82.8
1994년	0.4	0.5	99.0	12.2	0.6	85.1
1996년	0.5	0.4	99.0	14.2	0.5	84.1
1998년	0.4	0.3	99.2	13.0	0.4	85.9
2000년	0.3	0.2	99.4	9.8	0.5	89.0

주: 1) 대미수출의 제조업은 MTI(1단위)품목분류에서 일차산품(0)을 제외한 전산업임.
2) 대미수입의 제조업은 MTI(1단위)품목분류에서 농림수산업(1)을 제외한 전산업임.
자료: KOTIS(http://www.kotis.com/)

○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바, 1990년 18.3%이던 농업의 대미수입비중이 2000년 10% 이하로 감소되었음.

○ 수산업의 경우 큰 변화 없이 대미수출입 모두 미미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3) 한미 투자구조

□ 한미 양국간 투자(도착기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인의 對韓직접투자(FDI)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1997년 3억 9,120만 달러에 불과하던 미국의 對韓직접투자는 1998년 14억 7,92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9년에 19억 5,780만 달러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지난해에는 16억 8,651만 달러에 머물렀음.

<표 26> 한미 양국간 투자 추이

연도	미국인 대한직접투자		대미 해외투자	
	금액 (백만 달러)	비중(%)	금액 (백만 달러)	비중(%)
1990년	221.0	29.5	345.9	36.1
1992년	245.6	34.2	346.3	28.4
1994년	220.9	22.4	524.5	22.8
1996년	392.7	17.2	1,567.8	36.9
1998년	1,479.2	28.3	874.1	22.4
2000년	1,686.5	16.8	1,131.7	30.8

주: 미국인 대한직접투자, 대미해외투자 모두 도착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동향』.

- 총 해외직접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4.2%로 정점을 이룬 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금융위기 직후 부실기업 매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1998년 28.3%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2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EU, 일본 등 투자주체의 다변화에 기인하는 현상임.

- 이에 반해 한국의 對美해외투자(ODI)는 금융위기 직전인 1996년 高평가된 원화에 힘입어 15억 6,777만 달러로 정점을 이루었으며, 1997~98년 주춤하던 대미해외투자는 1999년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여 지난해에는 11억 3,169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나. 주요 통상현안

□ 최근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은 자동차, 철강, 의약품, 쇠고기, 양자간 투자협정(BIT), 반덤핑 규제를 비롯한 수입규제 등임.

1) 자동차

가) 교역 불균형

□ 한미 양국간 자동차 통상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미국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시장인 바, 2000년 한국 자동차업계는 47만 여대를 미국시장으로 수출하여 한국 자동차 수출의 미국시장 비중은 28.1%(대수 기준)에 이름.

- 특히 승용차 시장의 경우 1%대이던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1999년 3.2%에 이어 2000년 4.4%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수입실적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2000년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0.42%(4,414대)에 그치고 있음.

<표 27> 한국의 자동차 대미수출

(단위: 대,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판 매	14,687,599	15,059,667	15,086,618	15,596,546	16,958,568	17,410,320
승 용	8,634,964	8,525,754	8,272,074	8,183,412	8,750,287	9,005,296
상 용	6,052,635	6,533,913	6,814,544	7,413,134	8,208,281	8,405,024
한국의 대미수출	132,118	144,742	168,511	175,510	329,572	470,357
승 용	124,103	134,834	148,680	146,928	277,189	397,675
상 용	8,015	9,908	19,831	28,582	52,383	72,682
한 국 비 중	0.9	1.0	1.1	1.1	1.9	2.7
승 용	1.4	1.6	1.8	1.8	3.2	4.4
상 용	0.1	0.2	0.3	0.4	0.6	0.9
기 아	27,740	36,274	55,325	82,893	134,594	157,606
승 용	16,725	26,366	35,494	54,311	82,211	95,256
상 용	8,015	9,908	19,831	28,582	52,383	62,350
대 우	0	0	0	2,400	30,788	68,360
승 용	0	0	0	2,400	30,788	68,360
상 용	0	0	0	0	0	0
현 대	107,378	108,468	113,186	90,217	164,190	244,391
승 용	107,378	108,468	113,186	90,217	164,190	234,059
상 용	0	0	0	0	0	10,332

주: 상용차의 경우 SUV, 픽업 트럭, 밴 등이 포함됨.

자료: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http://www.autotradecouncil.org/)

- 그 중 미국 자동차는 2000년 한해 동안 1,268대가 수입되어 시장점유율이 0.12%에 머무름.

-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일일 평균 판매대수(1,321대)가 미국의 2000년 한해동안의 판매대수(1,268대)보다도 많음을 의미함.

- 2001년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바, 한국 자동차 업계는 판매차종 다양화에 힘입어 4월까지 대미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음.

<표 28> 한국의 자동차 수입

(단위: 대,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6
국내총판매	1,155,921	1,249,315	1,159,138	570,075	910,725	1,057,620	
수입판매	6,921	10,315	8,138	2,075	2,401	4,414	3,522
(비중)	(0.60)	(0.83)	(0.70)	(0.36)	(0.26)	(0.42)	(0.??)
미국	2,578	4,180	4,166	1,227	739	1,268	705
(비중)	(0.22)	(0.33)	(0.36)	(0.22)	(0.08)	(0.12)	(0.)
DaimlerChrysler	1,118	2,139	1,650	619	510	704	445
Ford	1,018	1,175	1,810	598	161	358	203
GM	442	580	403	1	68	182	57
기타[1]	0	286	303	9	22	24	0
유럽	4,343	6,135	3,972	848	1,662	3,146	2,423
(비중)	(0.38)	(0.49)	(0.34)	(0.15)	(0.18)	(0.30)	(0.)
Audi	0	696	409	87	12	56	118
BMW/Rover[2]	714	1,447	1,219	351	1,001	1,779	1,332
Mercedes-Benz	1,075	1,227	732	101	343	665	525
Saab	561	777	302	67	141	207	72
Volkswagen	622	315	189	115	2	86	98
Volvo	853	1,070	485	82	115	307	254
기타[3]	518	603	636	45	26	46	24
일본/Lexus	0	0	0	0	0	0	394
(비중)							(0.)

주: 1) 기타 미국자동차업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혼다, 스즈키, 도요다 등이 포함됨.

2) BMW社는 1994년 Rover Group을 매입하였으며, 2000년에 다시 Ford社로 매각함.

3) 기타 유럽자동차업계에는 Porsche, Jaguar, Peugeot, Rolls Royce, Fiat, Citroen 등이 포함됨.

자료: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http://www.autotradecouncil.org/)

한국 수입자동차협회(http://www.kaida.co.kr/)

한국 자동차공업협회(http://www.kama.or.kr/)

- 현재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01년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은 한미 양국간의 주요 통상마찰의 근원이 되어 자동차는 한미 통상마찰의 주요 품목으로 지적되어왔음.

□ 한국의 수입자동차 비율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정부의 공식적·비공식적 자동차 수입억제정책 때문임.

- 1973년 중화학공업정책이 발표되면서 그해 4월부터 고급외제승용차에 중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수입차 구매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수입차별정책은 거의 사라졌음.

- 하지만 수입차 구매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는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미국 자동차업계의 미비한 마케팅과 시장진입 노력 등도 또 다른 이유인바,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에 충분한 정비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판매망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 한국의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은 수입업체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설정으로 말미암아 미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에 비해 연료효율성이 떨어지고 차체가 너무 커 한국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수입차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선호 역시 미국 자동차보다는 독일 차종에 집중되고 있음. 지난해 BMW의 판매대수(1779대)가 미국 자동차 전체 판매대수(1268대)보다도 많은 사실이 이를 증명함.

- 또한 1999년 7월 수입선 다변화정책이 완전히 폐지되고 올해부터 Lexus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나) 1998년의 양해각서

□ 1990년대 들어 지속되어온 한미 양국간의 자동차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1995년에 이어 1998년 10월 자동차 시장개방과 자동차 관련관세 및 세제개혁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함.

- 이로 말미암아 자동차 통상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양준석 · 김홍률(2000) 참조.

- 1998년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정부는 배기량별 7단계로 되어있는 자동차 세율을 5단계로 축소 인하하였으며 자동차 구매과정에 부과되던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폐지하였음.

<표 29> 1998년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관세율	· 현행 8%를 유지하거나 향후 이를 양허 관세율(bound rate)로 묶어 WTO 등 다자간 협상에서 추가인하를 논의하기로 함.
자동차세제	· 배기량별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누진세율을 2000cc 이상의 대형차 관세율을 단일화하여 5단계로 축소함. · 당초 1998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특소세 30% 감면시한을 2005년까지 6년간 연장하기로 함.
검사인증	· 2002년 말까지 자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 · 판매 이전단계에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동차 형식승인을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저당권제도	· 1993년 폐지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제도를 1999년 상반기 중에 재도입하고 저당권 등록세율도 0.2%로 인하함.
기타	·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배제 및 소비자 인식개선 등을 위해 노력 · MOU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협의 ·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동차 업체에게 특별히 대출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속서(Side Letter)를 전달함.

자료: 양준석 · 김홍률(2000), 『주요 이슈별 한 · 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 그러나 이러한 양해각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동차교역 불균형이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6월 12~1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현안 정례 점검회의 및 제4차 한미자동차협의회에서 미국[6]은 소비자 인식 개선, 관세인하, 자동차 세제 개편 등을 요구하였음.

다) 소비자 인식

□ 1998년 MOU 체결 이후 제도적인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미국은 수입차 구매를 비애국적 행위로 인식되어지는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수입차 구매행위가 비애국적 행위, 과소비의 증거 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무사찰 및 주위의 비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들은 믿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지난해 5월 '2000년 수입자동차 모터 쇼'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장관의 관용차를 수입차로 대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라) 관세 및 자동차 세제

□ 최근 개최된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현행(8%)에서 미국수준인 2.5%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EU 수준(10%)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관세인하문제는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음.

- 자동차세의 경우 <표 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배기량별로 5단계

6) 이번 회의에서 Barbara Weisel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특허청, 저작권청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으로 파견되었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8년 MOU 체결 이전 한국의 자동차 세율을 분석해보면, 7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바 배기량 '1,500cc 이하'와 '2,000cc 이하' 사이에 60원의 세액차이가 있었고 '3,000cc 이하'와 '3,000cc 초과'에 다시 60원의 세액차이가 있었음.

- 그러나 1998년 MOU 체결 이후 개정된 세율에서는 2,000cc 이상의 구간들은 모두 '2,000cc 초과' 구간으로 정리되었고 cc당 세액 역시 감소되었음.

- 이러한 세제변경은 미국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2,500cc 이상이어서 수입차종이 차별 받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였기 때문임.

<표 30> 한국의 자동차 세율

비 영 업 용				영 업 용	
1998년 MOU 체결 전		1998년 MOU 체결 후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100원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20원	1,000cc 이하	100원	1,500cc 이하	18원
1,500cc 이하	160원				
2,000cc 이하	220원	1,5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50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하	19원
3,000cc 이하	310원				
3,000cc 초과	370원	2,000cc 초과	220원	2,500cc 초과	24원

자료: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

□ 지난 6월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은 다시 배기량 누진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배기량별 단일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한국정부는 자동차 누진제의 폐지는 자동차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당장 자동차 세제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제3호의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통계에 따르면, 1999년 결산기준 자동차세의 지방세 비중이 10.4%로 나타나 등록세(23.3%), 취득세(16.5%), 주민세(13.7%) 등에 이어 네 번째 항목을 차지하고 있음.

마) 표준 및 인증제도

□ 지난 6월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개편 등에 이어 수입자동차의 표준 및 인증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음.

- 관세인하와 세제개편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반해,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200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보다 높아 미국업체들은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기준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9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승용차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승용차로 분류되고있는 미니 밴의 범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견인고리를 앞뒤에 한 개씩 달도록 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이와 함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는 소음기준도 국제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며 개선을 요구하였음.

- 이에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별 법이나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러한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요구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현실적인 문

제 및 지적을 미국정부가 전격 수용하여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임. 이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미국업계와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그러나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양국간의 마찰은 관세인하나 세제개편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고 한국정부 역시 수입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없애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음.

바) 전망과 시사점

□ 미 의회는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준비중인바, 이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부시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301조를 발동하여 한국 자동차 시장을 조사하는 것임.

- 미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기업이나 USTR이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교역대상국가의 행위 또는 WTO 및 국제협정에 위반된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협상, 무역제재 등)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규임.

- 301조가 발동되고 조사결과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임.

□ 이러한 통상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시장개방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버리고 한국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물론 한국정부는 국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의 대외통상정책은 교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증대보다는 국내산업의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 그러나 교역으로 파생되는 소비자 후생 증대 역시 중요하므로 균형적인 대외통상정책을 고려해야 함.

- 편향된 대외통상정책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 자동차 통상과 관련된 구체적 전략으로 국세청이 수입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세무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2) 철강

가) 최근의 한미 철강교역 관계

□ 최근 한국 철강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 한국의 주요 철강수출 대상국임.

- 최근까지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의 주요 철강수출 대상국이었으며, 한국 또한 미국철강의 주요 수입국임.

-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인 1998년에 원화의 평가절하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수요 감소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은 급증하였음.

□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철강 수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VER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로 대응해 왔는데, 이러한 철강산업 보호 조치에서 한국도 거의 예외 없이 수입규제의 대상이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더욱 확대되었음.

<표 31>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철 강 (HS72)	454.5 (20.7)	242.1 (-46.7)	404.7 (67.2)	427.7 (5.7)	432.2 (1.1)	498.5 (15.3)	1,032 (107)	759.4 (-26.4)	769.6 (1.3)
철강제품 (HS73)	462.8 (-11.4)	521.1 (12.6)	552.4 (6.0)	559.3 (1.2)	512.6 (-8.3)	542.3 (5.8)	702.8 (29.6)	694.4 (-1.2)	803.8 (15.7)

註: ( ) 안은 증가율임.

자료: KOTIS

나) 미국의 요구사항

□ 2000년 7월에 상무부가 발간한 『세계철강교역: 구조적 문제와 미래해법 (Global Steel Trade: Structural Problems and Future Solutions)』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철강 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 포철에 대해서 민영화 추진, 경영에서 정부개입 배제, 더욱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활용을 강조하였고,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는 특히 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리고 부채주식전환 원칙 공개, 부채감소에 대한 원칙 공개, 기아와 한보철강에 대한 민영화 계획 공개, 산업은행과 철강업계간의 관계가 WTO에 합치한 지 확인, 국영화된 은행이 소유하는 철강업계의 부채에 대한 처리계획을 공개, 파산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퇴출 및 철강 구조조정 촉진 등을 강조하였음.

다)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조치

□ 1980년대 이후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실제로 부과한 반덤핑 건수는 총 37건이며, 이 중 철강을 대상으로 한 것이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부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조사(10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1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 철강재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되었음.

- ITC는 지난 6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철강재에 대한 201조 조사 요청을 근거로 산업피해공청회(9. 17~10. 1)를 개최하는 등 조사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음.

- 이번 ITC의 산업피해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철강재를 4개 품목군 33개 세부품목으로 분류하여 열연강판, 넹연강판 등 1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 철강재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였음.

- 반면, 조사대상 기간 중 명백한 수입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전기 강판, 철못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만 무피해 판정을 내리는 데 그쳤음.

□ 미국 정부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미국 철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았으며, 최근 미국 2위 철강사인 Bethlehem사의 파산 보호 요청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관측됨.

□ 미국 정부는 이번 산업피해 판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제조치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ITC는 산업피해 판정 품목을 대상으로 12월 19일경 구제조치 권고안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내년 2월 중순 부시대통령이 수량제한, 관세할당 등 구제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표 32> 미 국제무역위원회 판정 내용

품 목 군	산업피해 판정	무피해 판정
판재류	슬라브, 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석도강판(6개 품목)	전기강판(1개 품목)
봉형강류	열연·경량 형강, 냉간성형, 철근(3개품목)	잉곳, 궤조(rails), 와이어, 강연선, 철못, H형강, 철구조물(7개 품목)
강관류	용접강관, 관이음새(2개품목)	무계목 강관, 무계목 유정용 강관, 용접 유정용강관(3개 품목)
스테인레스 및 공구강	봉강·경량형강, 선재, 공구강, 와이어, 관연결구류(5개 품목)	슬라브, 후판, 로프, 무계목강관 등 (6개 품목)

라) 전망 및 대응방안

□ 미 ITC가 광범위한 산업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미 철강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산업피해 판정 품목에는 열연·냉연강판, 용접강관 등 우리의 대미 수출 주력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년 기준 전체 대미 수출액 중 비중은 60.5%에 달하는 실정임.

- 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차질 규모는 미국의 구제조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양국은 고위급 상호 서신교환을 통해 철강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1998~99년 한국 정부는 △한보철강에 대한 보조금지급 정지 △한보철강 매각을 시장원리에 따르고, 독립 에이전트에게 매각을 의뢰 △철강산업에

보조금 지급 자제 △포철의 이중가격제도 폐지 등을 약속하였음.[7]

- 현재 한국 정부와 업계는 1999년 이후 미국, EU 등이 수입규제를 강화되고 있어 철강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포항제철 등 일부 업체는 철강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또한 업계와 정부는 미국에 철강사절단을 파견해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은 미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야야 할 것임.

다. 전망 및 대응

□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급증으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 업계 및 의회內 보호주의 압력을 의식하여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다소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주요 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EU 등 주요 무역 흑자국에 대한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수단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새롭게 등장할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신중히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우선 미국 新행정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제고시키도록 노력

---

7) USTR, 2000. 4, *2000 Trade Policy Agenda and 1999 Annual Report*, pp. 197 ; USTR, 2000. 3, *200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 275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대우자동차 및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 고유가 등으로 인해 또다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지속적인 경제 개혁 의지를 미 新행정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한-북미간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비합리적 주장에 대한 반박논거제시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발생의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도 필요함.

- 우선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의 정경유착에 대한 선입견 및 소비자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선입견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1998년 10월에 체결된 자동차양해각서, 포항제철의 민영화 과정 등에서 우리가 약속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쇠고기 수입쿼터 문제, 반덤핑 관련 수입규제 조치 등의 통상현안에 있어서는 WTO가 통상마찰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로 부상함에 따라 WTO에 적극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자본·투자 양 측면에서 급속한 개방이 이루어져 있어 한-미 투자협정(BIT)의 체결로 미국의 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후속조치가 지연될 경우 한-미간에 조성된 신뢰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신뢰도를 현저히 추락시킬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함.

2. 거시경제

□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은 앞서 논의한 기본 방향을 따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좌우될 것임.

- 따라서 부시행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에 기초해서 논의됨.

가. 신경제 버블

□ 지난 11월 26일 국가경제연구국(NBER)은 2001년 3월 미국경제가 10년 동안의 팽창국면을 마치고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 이와 같은 경기고점(Peak) 발표는 미국경제가 9.11 테러사태 이전에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번 경기침체는 테러사태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신경제의 버블 붕괴임.

- 미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 장기호황을 누리고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지나치게 확장되자 거품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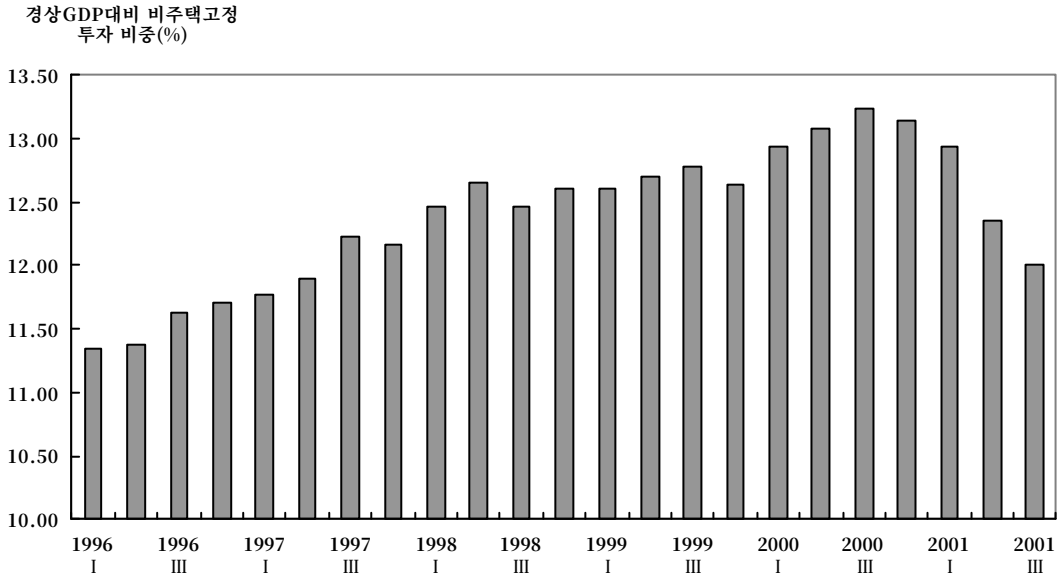
-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되기 마련이며 2000년 하반기 들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여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음.

□ 그러나 최근 신경제의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통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지난해 3/4분기 13.23%까지 치솟았던 경상GDP대비 비주택고정투자의 비중은 2001년 3/4분기 현재 12.01%로 1997년 3/4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급격한 투자지출증가는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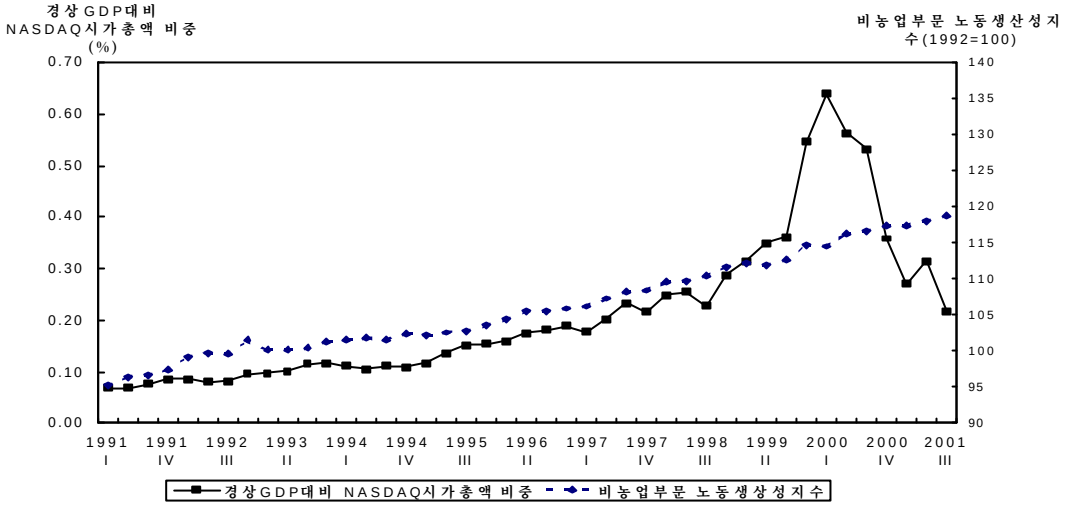
<그림 11> 경상GDP대비 비주택고정투자 비중



자료: 상무부 경제분석국

- 또한 경상GDP대비 64%에 달했던 NASDAQ 시가총액 역시 올 3/4분기 현재 22%로 감소하여 거품이 상당히 제거되었음.

<그림 12> 경상GDP대비 NASDAQ 시가총액 비중과 노동생산성



자료: NASDAQ, 노동부 노동통계국

나. 전망

□ 신경제 버블의 붕괴로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는 내년 1/4분기에 바닥을 형성한 뒤,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등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내년 2/4분기부터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올 11차례에 걸친 연준리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행정부와 의회의 공동 경기부양정책이 마련된다면, 미국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그러나 아프간 침공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동지역으로 확전 되고 미국에서 추가 테러가 발생한다면,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경제의 회복은 지연될 것임.

<표 33> 주요 기관별 경기전망

(단위: %)

	2001			2002		
	IMF	DRI-WEFA	OECD	IMF	DRI-WEFA	OECD
실질GDP증가율	1.3	1.0	1.1	2.2	1.3	0.7
소비자물가상승률[1]	3.2	3.1	2.1	2.2	2.0	1.2
실 업 률	4.7	4.7	4.8	5.3	5.9	6.2
경 상 수 지[2]	-4.0	-420.0	-413.6	-3.8	-446.1	-404

주: 1) OECD는 GDP디플레이터증가율 기준임.

2) IMF는 GDP 대비 비중(%)이며 나머지는 십억 달러 기준임

자료 : DRI-WEFA, Country Report, Oct, 2001

OECD, Economic Outlook, Nov, 200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1

다.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한·미간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동조화 현상과 한국의 대외교역과 투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 증시 폭락 및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의 주가가 동반 폭락할 경우 이는 국내수요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위축될 경우 세계적인 수요감소를 초래하여 수출시장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부시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대대적인 조세감면정책과 경기부양정책으로서의 지나친 재정지출확대 등에 따라 연방재정수지의 적자전환 가능성임.

- 미국경제가 침체해지자, 부시행정부는 대대적인 조세감면을 단행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확대가 예상됨.

- 따라서 지금까지 흑자이던 연방재정수지가 감소하고 심지어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이 연방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장기채 이자율이 연준리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게 됨.

- 일반적으로 장기채 이자율은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보(Mortgage) 이자율과 같이 움직이는데, 높은 장기채 금리는 높은 담보금리로 이어져, 연준리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지출이 진작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큼.

□ 한국경제는 대외부문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바, 대외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미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어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미 경제불안으로 인한 국내경제에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 및 투자의 의존도가 높아 미 경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및 투자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남두, 1990,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준석·김홍률, 2000,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준석·김홍률, 2000, 『미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 2000-1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1997,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민·김기수, 1992,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안보·통상관계』, 정세분석 92-04, 서울: 세종연구소.

정인교, 1998,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서창배, 2001, 『WTO 출범이후 한국의 무역분쟁현황과 정책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최낙균, 2000, 『WTO 뉴 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ailey, Martin Neil, 2001, *"Economic Policy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Number 01-10,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Bergsten, C. Fred, 2000, "The United States' Interest in New Global Trade Negotiations," In Jeffrey Schott ed, *The WTO After Seattle*,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lliot, Kimberly Ann, 2000, "Getting Beyond No ... ! Promoting Worker Rights and Trade," In Jeffrey Schott ed, *The WTO After Seattle*,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ang, Bingsong, Xiaoli Han, Sumiye Okubo, and Ann M. Lawson, 2000, *"U.S. Transportation Satellite Accounts for 1996."* Survey of Current Business, May 2000, Washington, D.C.: Department of Commerce.

Jackson, John H, 2000, "Dispute Settlement and a New Round," In Jeffrey

Schott ed. *The WTO After Seattle*.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S. Trade Deficit Review Commission. 2000. *The U.S. Trade Deficit: Causes, Consequences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 Washington, DC: U.S. Trade Deficit Review Commission.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1. *Identification of Trade Expansion Priorities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116*. Washington, D.C.: USTR.

World Trade Organization. 2001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01)/DEC/W/2.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2001b.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WT/MIN(01)/W/10.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2001c.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W/1.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2001d. *Proposed Procedures for Extensions under Article 27.4 for Certa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G/SCM/W/471/Rev. 1.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Zoellick, Robert B. 2001. *American Trade Leadership: What is at Stake?*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xecutive Summary

Economic Policy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And US Economic Performance in 2001

Moonsung Kang · Suyeob Na

After 8 years of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Republicans have taken office at Washington, D.C. in January 2001. Unfortunately, after taking office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facing at challenges, including economic downturn, the tragic event of September 11th, etc. In this book we discuss economic policy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to boost the US economy which has been getting worse since the second half of 2000. After a 10-year economic boom in 1990s, the US economy has been in a recession since this March, which stems importantly from the post-bubble aftershocks. There were other forces at work in setting the stage for this downturn, especially the impacts of sharply rising energy prices during late 1999 and 2000. However most of the other proximate causes of this recession are all traceable to the bubble-induced excesses of the US economy. In addition, the tragic event of September 11th at New York and Washington, D.C. has deepened the economic downturn of the Unites States.

The Bush Administration set tax-cut policy against the economic downturn as the traditional Republican Administrations have done. In addition Congressional and Administration leaders have been examining the appropriate fiscal policy response to the recent terrorist attacks. The Federal Reserve has provided liquidity to financial markets, and has reduced its federal funds rate 11 times this year by 475 basis points.

Congress and the President agreed on a $40 billion spending package for defense, rescue and rebuilding efforts, and an airline bailout of $5 billion, plus additional loan guarantees. We believe the recession will last until the first half of 2002, but massive monetary and fiscal stimulus will lead to a recovery in the second half of 2002.

姜文盛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1)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2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mkang@kiep.go.kr)

著書 및 論文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공저, 2000)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2000) 외

羅秀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19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syna@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공저, 1997)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공저, 2000) 외

『투병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공저, 2000)

Policy References 01-04

Economic Policy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and US Economic Performance in 2001

Moonsung Kang · Suyeob Na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정권초기 경기침체기를 맞으면서 선거전 공약 당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9.11 테러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출범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정운용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에 다사다난했던 2001년 미국의 경제동향을 검토하고 부시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94320
9 788932 220727
ISBN 89-322-2072-7
89-322-2068-9(세트)
정가 7,000원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1179 FAX: 3460-1144